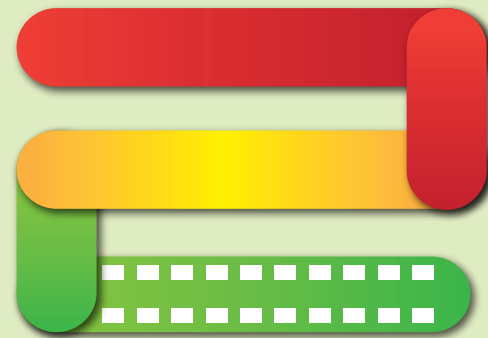




청소년 사진·동영상 콘테스트

접수기간

2017. 5. 1(월) ~ 6. 9(금) 자정까지

응모주제

통일에 대한 자유 주제

응모분야

응모분야	출품작 규격			
	시 간	파 일	용 량	해상도
사 진	-	JPG	5MB 이내	1,600×1,200 이상
동영상	3분 이내	AVI, WMV	100MB 이내	1,280×720 이상

참가대상

초·중·고등학교 및 동 연령대 청소년(개인/팀)

시상내역

시상내역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수 상 팀	시상금액	수 상 팀	시상금액	수 상 팀	시상금액
대 상	1명(팀)	100만원	1명(팀)	100만원	1명(팀)	100만원
최우수상	2명(팀)	50만원	2명(팀)	50만원	2명(팀)	50만원
우 수 상	3명(팀)	30만원	3명(팀)	30만원	3명(팀)	30만원
장 려 상	10명(팀)	5만원	10명(팀)	5만원	10명(팀)	5만원

※ 사·도별 예선대회 시상(*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상) 별도 실시

심사기준

주제적합성, 창의성, 표현력을 중심으로 평가

접수방법

시·도별 상이(홈페이지 내용 참고)

문 의 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www.nuac.go.kr)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02-2250-223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2017년 04월 Vol. 126 COVER STORY 김정은의 숙청정치

2017년 04월 Vol.126

통일시대



COVER STORY

김정은의 숙청정치

김정남 암살로 본 북한 특수공작기관
중국의 경제 사드 보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올라가자

6·25 아픔을 딛고
금강산을 올라가자

흐르는 땀 식혀주는
바람이 되어
금강산을 올라가자

분단의 슬픔을 딛고
금강산에 올라가자

이제는 갈 수 있어
행복하다고
소리를 질러보자

통일이 되어 좋다고
함께할 수 있어 좋다고
웃으며 올라가자



정승훈(전남 영광군 백수중학교 1학년)
영광군협의회 주최
'2016년 평화통일
염원 글쓰기 공모전' 우수상



06



14



42



34



62



표지 이야기
역사를 바로 알아야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많이 보고 경험해 통일의 주역으로 자라주렴.

통권 제126호 2005년 5월 1일 창간
발간등록번호 11-1081000-000009-06
ISSN 2508-7177

발행일 2017년 4월 1일

발행인 권태오

발행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우)04605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4

대변인실 02-2250-2264~6

기획편집위원 김근식, 김영수, 김영호, 김진하, 박인휘,
이화옥, 정영순, 조봉현

편집디자인·인쇄 동아일보 출판국·(주)교학사
자료사진 동아DB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입니다.
- <통일시대>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통일시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www.nuac.go.kr) e-book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02 이달의 공감

올라가자

06 커버스토리

김정은의 숙청정치

숙청 통해 권력 강화하는 공포정치
'백두혈통' 불문율까지 무너져

10 특집

동북아 안보 정세와 각국의 입장

북핵 문제 동북아 일치된 대응 난관
한미동맹 비탕 대북 제재 강화가 최선

14 분석 I

국제사회 대북 제재 평가와 전망

더 강해진 안보리 대북 제재
중국의 성실한 이행이 관건

18 분석 II

김정남 암살로 본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노동당과 군부 주도권 경쟁
이번 암살은 해외정보국 작품

22 포커스

북한이 가장 바쁜 달 4월

3대 세습 정당화 위해
김일성 생일 최대한 활용

26 진단

중국의 사드 보복

치졸한 중국의 '경제 압박'
중국 의존 줄이는 계기 삼아야

30 이슈

파고 거세지는 남중국해

美 '아시아 중시정책'과
中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충돌

34 북한 IN

평양의 양극화

같은 평양 맞아?
너무나 다른 생활수준

36 과거에서 미래를 찾는다

영조의 탕평책

힘의 논리를 부도덕하게 보는 전통이
조선 왕조를 멸망으로 이끌었다

40 With You

사회적 기업 '요벨' 박요셉 대표

"카페 이어 생태순환 농업...
탈북 청년 자립 돕습니다"

42 현장 중계

2017 한중 평화통일포럼

"북핵·미사일 위협 사라지면
사드 불필요하게 될 것"

46 라운지

제18기 자문위원 어떻게 위촉되나

올바른 국가관, 통일 열정 가진
사회 리더 2만여 명으로 구성

48 민주평통 소식

제 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열려
2017 자문위원 연수 시작돼
중남미 강연회 등

60 협의회 탐방

충북 청주시협의회

"통일의 주역은 청소년
청소년 통일 의식 고취에 힘쓸 것"

62 우리 동네 역사 탐방

경주 문무대왕 수증릉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리라'
파도와 바람이 일깨우네

66 통일시론

남북통일은 어느 체제로?





김정은 집권 6년 동안
당·정·군 간부 수백 명이 숙청됐다.

숙청 통해 권력 강화하는 공포정치 ‘백두혈통’ 불문율까지 무너져

김일성, 김정일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정적을 숙청했지만 소위 ‘백두혈통’은 건드리지 않았다.

김정남 암살은 김정은이 자행하는 숙청정치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당했다. 여러 증거를 통해 북한이 김정남 암살 배후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북한 당국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남 살해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김정남은 이복동생인 김정은이 자기를 살해할 것을 두려워했는지, 편지를 보내서 살려달라고까지 했다. 그

럼에도 김정은은 잔인하게 김정남을 살해했다. 김정남 살해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남은 왜 살해되었는가. 김정남은 김정일과 성혜림 사이에서 태어난 김정일의 장남이자 김일성의 맏손자이다. 김정은으로서는 장손인 김정남에 대한 열등감이 심했을 것이다. 김일성은 첫 손

자인 김정남을 매우 귀여워했으나, 김정은은 김일성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남은 한때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지지할 정도로 북한 권력 구도에서 주목받았던 인물이었다.

김정은으로서는 이런 김정남의 존재가 눈엣가시 같았을 것이다. 또한 북한 급변사태 같은 유사시에 중국에서는 김정은의 대안 인물로 김정남을 내세우거나, 장성택을 추종했던 세력들이 김정남을 지도자로 추대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심지어 김정남은 김정은의 3대 세습을 반대한다고 공공연히 언급함으로써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렸을 것이다.

한편 김정남은 북한 정권의 해외자금 거래 경로를 잘 알고 있어 혹시나 김정남이 서방으로 망명하면 북한 정권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추정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로 김정은은 김정남을 살해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강도 심해지는 공포정치

북한 권력 엘리트층은 김정남의 암살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남은 이른바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김일성 직계가족인 ‘백두혈통’이다. 김정일은 이복동생 김평일, 삼촌 김영주, 계모 김성애 등 자신과 권력 경쟁을 벌였던 인물들을 그대로 살려둬으로써 백두혈통은 죽이지 않는다는 일종의 불문율을 지켰다.

2013년에 발생한 장성택의 처형은 매우 충격적이었으나, 그때만 하더라도 장성택은 김일성 직계인 백두혈통이 아니므로 처형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김정남 살해는 그 불문율을 깨뜨리면서 백두혈통을 포함한 그 누구도 김정은이 죽일 수 있다는 사

이수석

국가안전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려대 정치학 박사.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 역임.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 국가안전전략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실을 드러낸 것이다. 그만큼 김정은의 공포정치, 숙청정치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숙청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는 공포정치를 펼쳐왔다. 김정은 집권 6년 동안 당·정·군 간부 수백 명이 처형되거나 숙청됐다. 2012년 7월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의 숙청을 시작으로 김정일 운구차를 호위했던 김정각, 우동

측 등 군부 인사들이 모두 실각하거나 한직으로 쫓겨났다. 2013년 12월 장성택의 처형, 2015년 4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처형에 이어 5월에는 김정은이 추진하는 산림녹화 정책에 불만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최영건 내각 부총리가 처형됐다.

2016년 7월에는 김용진 교육부총리가 자세가 불량하고 현대판 종파분자라는 낙인이 찍혀 총살됐으며, 황민 전 농업상과 교육부 관리 리용진이 처형됐다. 이렇게 처형된 간부들의 친척, 부하,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항상 숙청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일반 주민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처형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정은 시대 숙청은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다른 숙청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도 숙청과 처형은 있었다. 북한의 정권수립기에 권력 기반이 취약했던 김일성은 권력 기반을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간부들을 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냈다. 남로당파, 중국 연안파, 소련파 등 자신에게 도전하는 세력들을 숙청해 김일성 1인 지배 체제를 확립했고, 그 이후에도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빨치산 내 갑산파와 군부 강경파 등을 차례로 숙청했다. 잔혹한 처형과 고문이 수반된 숙청이었지만, 당시에는 주로 정치적 배경하에 전개된 숙청이었다.

김정일 시대에도 1995년 6군단 쿠데타 미수사건



김정은에 의해 숙청당한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우동측 보위부 1부부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영건 내각 부총리(왼쪽부터).

처럼 김정일의 권력에 도전하려 했던 조직적인 반 김정일 세력들에 대한 숙청이 있었다. 또한 1997년 농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서관희 농업담당 비서를 공개 처형하고 그다음 해까지 수십 명의 고위 간부를 처형한 적이 있었다. 2009년에는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을 처형한 바 있다. 김정일 시대에는 정책 실패에 책임을 무는 형태의 간부 숙청이 많았다.

그런데 김일성·김정일 시대 숙청의 특징은 반당, 반종파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 크게 연루되지 않으면, 김일성 집안이나 고위급 인사들 중 일부는 숙청을 당해 지방의 농장이나 공장, 산간벽지에 있다가도 일종의 ‘혁명 교화사업’을 받고 중앙으로 복귀하곤 했다는 점이다.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는 김정일과의 권력투쟁에서 패배했으나, 처형되지는 않고 20여 년 동안 산간벽지에 연금됐다가 다시 평양으로 와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을 맡았다. 1960년대 말 군부 강경파의 김일성 권위 도전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숙청됐던 최광 전 북한군 총참모장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복귀할 수 있었다. 장성택을 비롯한 김정일 시대 상당수 고위 간부들은 한 번씩 좌천을 겪었거나 혁명 교화사업의 대상이

돼 농장이나 교육기관으로 쫓겨나 교육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에 김정일에 대해 충성을 바칠 수가 있었다.

개인적 감정으로 숙청

김정은 시대 숙청은 다르다. 김정은 시대에는 어떤 정치적 파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숙청, 정책적 책임을 묻는 숙정보다는 주로 개인적 감정에 근거한 숙청과 처형이 많다. 과거에는 강등이나 근신, 재교육 등의 처벌을 내릴 잘못에 대해 김정은은 해당 간부를 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버릴 때가 많다. 김정은은 군부대나 산업 현장 방문 시, 권력 엘리트들에 대한 공개적 질타가 일상적이어서 간부급들은 가급적 김정은 옆에 가려하지 않는다.

특히 김정은은 개인적 관심 사업일수록, 실적 부진자에 대한 강력 처벌과 문책성 인사를 남발했다. 김정은의 공개 질책이 있으면 당 조직지도부의 검열이 이어지고, 해당 관련자는 강도 높은 처벌을 받았다. 예컨대 김정은은 자신이 건설을 지시한 미림승마구락부 현장을 자주 찾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 후방총국장 전창복을 임명한 지 4개월 만에 전격 교체했고, 지방 방문 도중 거리에 쓰레기가 많



김일성 동생 김영주(왼쪽)는 김정일과의 권력투쟁에 패했지만 처형되지 않았고, 김일성은 최광(가운데)을 숙청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복귀시켰다. 김정은은 이복동생 김평일(오른쪽)을 숙청하지 않았다.

다고 질책한 뒤 시당 책임비서를 현장에서 해임해 숙청한 일도 있었다. 2015년 초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과 조영남 국가계획위 부위원장은 김정은에게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숙청됐다.

그리고 김정은은 대회장이나 회의실에서 조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징벌성 문책을 직접 지시했다. 김정은은 “중요 회의에서 졸거나 장난하는 일꾼들은 사상적으로 병든 사람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 10월 하반기 평양에서 개최된 중대장 정치지도원 대회 때 회의장에서 졸았던 군 간부들을 강등시키거나 해임시켰다. 현영철, 장성택, 김용진의 처형 죄목 중에 졸거나 박수를 건성 치거나, 자세가 삐딱하다는 등의 사소한 사안들이 있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단순히 김정은 눈 밖에 났다는 이유로, 사소한 개인적 이유로 처형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간부들은 불안해하고 심지어 책임을 지는 고위직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숙청정치, 정권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

간부들을 수시로 처형하는 북한의 숙청정치는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공고하지 못하고 김정은 체제가 불안하다는 증거이다. 김정은은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간부들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

다. 김정은은 연로한 간부들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자기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할아버지, 아버지와 달리 직접 권력을 쟁취해보지 못한 태생적 콤플렉스이자 한계이다.

여기다가 김정은은 후계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간부들의 성향을 잘 모를 수밖에 없고 그만큼 불안감도 클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강력한 지도자라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공포정치를 펼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숙청정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정권이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을 김정은 스스로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김정은식 숙청정치는 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권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처형이나 숙청은 지도자의 리더십이 취약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숙청정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체제는 오래 지탱할 수 없다. 현재 지구촌은 개방화·글로벌화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은 이미 변했고, 이들의 경제생활은 당과 수령, 정부와 별개의 영역에서 움직이게 된 지 오래이다. 북한 당국이 폐쇄·고립국가를 지향하면서 숙청의 정치를 구사하는 한, 김정은 정권의 미래는 밝지 않다. **NUAC**



북한이 3월 6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북핵 문제 동북아 일치된 대응 난관 한미동맹 바탕 대북 제재 강화가 최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모두 우리와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둘러싸고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거세지고 있다.

북한 핵 개발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격랑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다.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대북 대응전력의 조기 전력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대북 선제타격과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등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한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 개발은 반대하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는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실제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수단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도발로부터 촉발된 한반도의 갈등과 대립이 동북아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최근 들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에 제4차 및 제5차 핵실험을 통해 핵의 다중화, 경량화, 규격화 등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를 8번이나 실시했으며 8월에는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또한 북한은 지난해 3월 미사일 고체로켓엔진 지상실험 성공을 주장하더니 올해 2월에는 고체연료 중·장거리미사일(IRBM) 시험발사 성공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올해 말로 예정되었던 사드 배치를 앞당기고 있다. 그 결과 사드 포대 구성품인 발사대 일부가 한국으로 이동되었다. 한편 한국은 올해 안에 한국형 대공방어미사일인 MSAM의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실전 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북한 핵·미사일의 또 다른 표적인 일본도 감시위성의 확대를 추진하고 일본 내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일본은 이러한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를 자국의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정상국가화'하는 계기로 활용하려 한다.

세컨더리 보이콧 통한 중국 압박

최근 북한이 벌인 일련의 핵 도발 움직임에 대해 가장 당황한 나라는 미국일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 개발이 미국에 치명적인 것은 ICBM 시험발사 성공일 것이다. ICBM 발사 성공은 북한의 미국 본토 핵 타격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해 북한 핵 도발 대응을 위한 미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대북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선거기간 동안 나타난 트럼프의 주장을 통해 새로운 대

조 남 훈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미국 브라운대학교 경제학 박사 수료, 국방부 장관정책보좌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센터장 역임. 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구실 책임연구위원

북정책의 일단을 예상할 수는 있다. 첫 번째 정책은 대중국 압력 강화를 통한 대북 문제의 해결일 것이다. 트럼프 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중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대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중국은 북한에 대한 설득과 압력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북핵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이러한 생각이 정책에 반영되는 듯하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작은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참여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발동이다. 미국은 지난 3월 7일 미국 기술이 포함된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네트워크 장비 등을 북한에 불법 판매한 중국의 통신 장비업체 ZTE에 대해 약 11억9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제재 위반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 중 가장 큰 규모다. 한편 미국은 또 다른 중국 기업인 화웨이의 유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처벌 대상 중국 기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도 고려하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에 매우 치명적인 대북 제재 수단이다. 불법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엄격하게 실행될 경우 수많은 중국 기업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중 압박은 동시에 두 가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첫째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좀 더 충실하도록 만들 수 있다. 둘째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한민국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만약 한반도 사드 배치 당사자 중 하나인 미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중국의 대한민국 보복을 완화시킬 수만 있다면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두 번째 정책은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옵션의 추진이다. 상당수 미국 정·관계 인사들은 북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월 20일 중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고 있다.

중국의 반응은 양면적이다. 북한에 핵 개발 중단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준수를 다짐하면서도 자국 국가이익을 내세워 북핵 저지를 위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중지 또는 철회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핵 도발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수단이 선제타격이기 때문에 대북 선제타격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쉽게 실행할 수는 없다. 전면전 확대 가능성 때문이다. 하지만 선제타격은 그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실행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대북 압박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는 대중국 압박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안정적 성장을 원하는 중국 역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방 삼각동맹과 남방 삼각동맹의 부활

이와 같은 한국과 미국의 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양면적이다. 한편으로는 북한에 핵 개발 중단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준수를 다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연합 군사훈련의 중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은 자국 국가이익을 내세워 대북용이 명백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중지 또는 철회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소재 한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규제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 외중에 사드 배치 반대를 공동의 목표로 중국, 러시아, 북한의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듯하다. 그 결과 냉전 이후 사라진 중국, 러시아, 북한을 한 축으로 하는 북방 삼각동맹과 한국, 미국,

일본을 또 다른 축으로 하는 남방 삼각동맹이 다시금 부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상당히 소원했다. 북한 핵 개발과 그에 따른 중국의 대북 제재 때문이다. 이를 반영해金正은 집권 이후 5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북·중 정상회담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예외적인 일이다. 더불어 양국 고위급의 왕래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2015년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일 기간 동안 류원산 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과 2016년 2월 제4차 핵실험 직후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의 방북을 제외하고 최근 중국 고위직의 북한 방문은 없었다. 한편 2016년 6월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에게 제7차 당대회 결과를 설명한 것과 2017년 1월 최희철 외무성 부상이 방중한 것 이외에 북한 고위급의 방중도 없었다.

하지만 그 외중에 사드 배치 반대와 관련해 중국과 북한의 연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7월 라오스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 동안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양자회담에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한 바 있는데 이때에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도 논의된 듯하다. 양국 외교장관회의가 2년 만에 재개되었음을 고려할 때에 사드 문제를 연결고리로 북·중 협력이 재개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 28일 중국 정부 초청에 따른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중 역시 사드 배치에 대응해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시도로 보인다.

중국은 박근혜정부 초기 한국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

해 한반도 사드 배치를 저지하려 했다. 여러 차례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했으며 2015년 전승절 열병식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배려함으로써 한중 간 유대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 내세우면서 사드 배치를 미뤘기 때문이다. 한중 간 밀월관계가 유지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지속될 수 없었다.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이다. 급해진 한국은 무엇보다 안보를 우선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과 한반도 사드 배치에 합의하게 됐다. 그 결과는 한중관계의 급속한 악화였다.

북핵은 동북아의 핵심 안보 이슈

동북아의 핵심 안보 이슈는 북핵 문제다. 따라서 북핵을 반대하는 모든 나라들 즉,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및 러시아 등 동북아의 모든 국가들이 북한에 대응해 협력적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실 국제정치와 각국의 이익 충돌이 이를 막고 있다. 앞서 살펴본 사드 배치에 대한 이해의 충돌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및 일본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대립과 갈등이 역내국가 간의 협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 위협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미국 및 중국에서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북핵 문제가 아직도 양국 국제정치의 최우선 과제가 아닌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북핵 문제 대응은 여전히 미·중관계를 전제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미·중관계는 향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대립적일 것 같다.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가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의 대중국 압박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동북아의 일치된 대응을 기대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현재의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인 듯하다. **NUAC**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매우 위험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더 강해진 안보리 대북 제재 중국의 성실한 이행이 관건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대북 제재가 성과가 없었다”, “오히려 북한의 비타협성만 고취시킨다”는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펼쳐온 대북 경제 제재의 성과와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을 계기로 시작했다. 북한의 남침에 직면해 미국은 1950년 6월 28일 수출통제법을 적용해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12월 16일에는 적성국교역법을 적용해 북한 제품의 수입과 대북 금융 거래를 전면 금지했으며, 미국 내 북한 자산을 동결했다. 이후 2000년대 초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미국의 양자 제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무게감 덕분에 사실상 다자 제재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12월 기준 미국은 총 14개 국내법을 적용해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 14개 법률 중 상당수는 규정을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한 미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상응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인은 미국과의 경제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미국과 경제관계가 있는 나라나 기업·개인은 북한과의 거래에서 미국으로부터 받는 불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기대되지 않는 이상, 자발적으로 북한과의 경제 거래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애초 이러한 2차 제재(Secondly Boycott) 효과를 전제로 고안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보리 결의안 2312호의 파괴력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 미국과 북한은 경제적 거래 관계가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효과를 가지려면 ‘양자 제재의 형태를 띤 다자 제재’, 즉 2차 효과에 중점을 둔 제재가 필요했고, 미국이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압도적 무게감은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둘째, 유엔의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가능하려면 중국과 소련의 대북 제재 동참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이는 냉전시대에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2000년대 들어 대북 경제 제재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됐다. 첫째, 양자 제재의 주체가 다양화됐다. 미국만이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서울대 경영학 석사, 정치학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연구실 수석연구원 역임, 저서 <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등

아니라 유럽연합(EU),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이 사실상 대북 금수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심 무역 파트너였던 한국과 일본의 대북 금수조치는 북한 경제 및 무역 패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경우 공식적, 제도적으로는 양자 제재를 거부하고 있지만 특정 시기, 예를 들어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는 경

우 일시적으로(통상 3~4개월) 비공식적으로 양자 제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 유엔이 대북 경제 제재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함에 따라 명실상부한 대북 다자 경제 제재가 시작됐다. 2006년 이후 유엔 안보리는 총 7차례에 걸쳐 대북 경제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제재 수준 역시 점진적으로 강화됐다. 2016년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의 경우 ‘최근 20년간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로 평가되고 있으며, 같은 해 11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2321호는 그보다 더 강력한 제재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과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제재가 북한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준 것은 사실이지만 제재가 겨냥했던 애초의 목적, 예컨대 대량살상무기 포기나 같은 행동의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북 제재가 성과가 없었다거나, 제재가 오히려 북한의 비타협성만 고취시킨다는 식의 회의론이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제재가 소기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무용했던 것은 아니다. 제재의 성과와 관련해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하지만 종종 망각되는 사실은 제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능력을 크게 제약했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에서 국제사회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능력이 진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일 제재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핵보유국 북한을 마주했을 것이 확실한 것이다.

다음으로 제재의 두 번째 목적, 즉 고통을 줌으로써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성공적



중국의 무연탄 수입 중단으로 북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유일한 성공 사례는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제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BDA 금융 제재 이후 북한은 금융 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회피 경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역의 경우 처음에는 한국과 중국, 이후에는 중국이 주요 탈출구로 기능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것이 이를 입증한다.

미국의 2차 제재 시행 여부는 미지수

하지만 이 역시 실패로 결론짓기는 이르다. 두 가지가 핵심인데, 미국의 2차 제재 발동 여부가 하나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21호의 시행이 다른 하나이다. 미국이 북한 때문에 중국과의 통상 마찰을 감내하면서까지 본격적인 2차 제재를 시행할지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안 2321호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견된다.

안보리 결의안 2321호의 핵심은 연 4억 달러 내지 750만 톤가량으로 못 박은 무연탄 수출쿼터에 있다. 이 부분이 집행될 경우 북한은 기존 대비 연간 6억 달러의 외화

획득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1991년 이후 누적 외화수지 흑자(약 24억 달러)의 약 25%에 해당되는 큰 액수이다. 다시 말해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31호에 따른 제재가 성실히 집행될 경우 북한의 외화는 4년 내에 고갈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해 대이란 제재에 버금가는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화수지의 적자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외화 재정的高갈을 의미한다. 특히 안보리의 제재 강화로 대량살상 무기 및 재래식 무기 수출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무연탄 수출의 대폭적 감소가 가져오는 충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국가 통제 경제 부문(군수 부문 및 민수 부문의 일부)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 및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데, 외화수지의 대폭적인 감소는 이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북한 당국으로서는 국가 통제 바깥의 부문, 즉 시장에서 부족한 외화를 추가적으로 흡수할 수밖에 없다. 이는 소비와 생산 두 영역에서 북한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올 전망이다.

첫째, 현재 북한 시장은 외화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 무연탄 수출의 대폭적 감소는 시장으로 유입되는 외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의 돈줄에 큰 구멍이 생겼다. 사진은 폐쇄 전 개성 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 모습.

화의 대폭적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여기서 북한 당국의 외화 흡수정책이 추진되면 외화를 기반으로 한 시장 거래가 중단되면서 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재 북한의 생산과 유통이 부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현상의 배경에는 ‘돈주’의 투자가 자리 잡고 있다. 돈주는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 생산이나 판매에 필요한 상품(원자재, 설비, 소비재 등)을 구매하고 인건비를 대주면서 공장과 국영상점망을 가동시키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윤 일부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부동산 개발 역시 상당 부분 돈주의 투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만일 북한 당국의 외화 흡수정책이 추진된다면 돈주는 투자를 중단할 것이고 이미 투자한 자본 역시 조기 회수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그나마 가동되던 북한의 생산을 멈추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망은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 2321호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그간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 일정 기간(통상 3개월) 대북 제재를 집행하다가 곧 다

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안보리 결의안 2270호의 경우에도 ‘민생경제’ 조항을 유연하게 해석함으로써 지난 8월부터는 대북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의 ‘물타기’ 더 이상은 어려울 전망

하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물타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물량 및 금액상 쿼터가 명문화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세관 기록 조작 등을 통해 필요시 무연탄 수입량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선박으로 운송되는 무연탄의 특성상 이러한 조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은 최소한 무연탄 수입과 관련해서는 그간 대북 제재에서 보여왔던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실제 지난 2월 중순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 2321호에 따른 금액 쿼터가 다 찼기 때문에 2017년 대북 무연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이것이 중국이 북한을 버리는 카드를 선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미 2013년부터 중국의 광산업 구조조정 및 환경정책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의류 임가공 수출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더 빠르게 증가할 소지가 다분하다.

한편 북한은 2015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수입대체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 생산을 증대시켜야 하고 여기서 기본 전제가 전력 생산 증가이다.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의류 임가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전력 증산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하면 이번 대북 제재는 중국과 북한의 산업무역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하고 있던 것을 단지 ‘촉진’하고 있을 따름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최근 이뤄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과 중국은 산업정책 및 무역관계에서의 변화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제재로 그 과정은 급진적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그리고 새로운 산업정책과 무역관계가 안착될 때까지 북한 경제는 큰 피해에 직면할 것이다. **NUAC**



노동당과 군부 주도권 경쟁 이번 암살은 해외정보국 작품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테러로 사망했다. 북한의 대남공작 체계를 살펴보고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특징을 대조함으로써 김정남 암살을 실행한 대남공작조직이 어디인지를 분석해본다.

지난 2월 13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마카오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출국 수속을 하던 김정남이 2명의 외국인 여성에 의해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2명의 여성이 손에 젤 같은 물질을 바른 상태에서 장난하듯 김정남의 얼굴을 문질렀고, 김정남은 그로부터 15~20분 만에 사망했다.

백주에 수많은 인파가 붐비는 국제공항 청사 안에서 장난스러운 행동에 의해 김정남이 암살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김정남 암살을 계기로 북한의 대남공작 및 테러 전문 조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북한 대남공작부서에 근무했던 필자의 관점에서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특징과 함께 북한의 대남공작조직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공작부서가 김정남 암살을 실행에 옮겼는가에 대해 분석해보려고 한다.

김정남 암살은 제3자를 고용해 테러 대상을 제거하는 고전적인 '청부살인' 수법에 '장난'이라는 형식을 가미한 새로운 테러 수법이라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청부살인은 제3자(살인범)를 고용해 대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제3자에게 제거 대상을 미리 알려주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살인범은 본인의 행위가 상대를 죽이는 행위라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암살 수법을 살펴보면 고전적인 청부살인 방식과 차이가 있다. 암살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2명의 여성들이 장난 비디오 출연료 정도의 보잘것없는 대가를 받고 자신들의 행위가 상대(김정남)를 죽이는 행위라는 것도 모르고 가담했고, 그 결과 암살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청부장난살인'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암살 방식으로 부르는 것이다.

북한이 외국인 여성들을 활용한 '청부장난살인' 방식으로 김정남을 암살한 것은 국제사회의 공격과 비난을 조금이라도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 과거처럼 북한 공작요원이 직접 테러 행위를 감행하다 탈미가 잡힐 경우 북한이 직접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외국인들은 잡히더라도 북한에 직접적인 화살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항시적으로 테러 위협에 시달리는 김정남에

김 동 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정일정치군사대학 졸업, 경남대 북한대학원 북한학 석사,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 북한 노동당 대외연락부 공작원으로 세 차례 남파됐다. 국군기무사령부 분석관 역임. 저서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 등

게 가까이 접근하는 데는 북한인보다는 외국인이, 같은 외국인이라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용이했을 것이라는 판단도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이유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자행한 각종 테러 행위의 이면에는 대남공작부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는 말 그대로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 대남공작부서는 잘 훈련된 특수공작요원들을 보유하고 있어 남한은 물론 해외에서도 각종 테러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통일전선사업부와 정찰총국이 테러와 대남공작 주도

현재 북한의 대남공작조직은 크게 노동당과 군부 등 2개 기관에 포진돼 있다. 노동당 내에는 통일전선사업부(약칭 통전부)와 문화교류국이 있고, 군부 소속으로는 정찰총국이 있다. 노동당 대남공작기구인 통전부는 부서 개편 등 다소 변동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대남 선전 및 통일전선 공작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형태의 남북 대화와 교류, 대남정책 수립과 남북관계 전반을 관장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라 할 수 있다.

노동당 문화교류국은 그동안 연락부→사회문화부→대외연락부→225국→문화교류국 등으로 명칭이 바뀌어 왔다. 남한 및 해외에 공작원들을 파견해 현지에서 반미·반정부, 친북인사들을 포섭한 다음 그들을 통해 남한 내에 지하당과 대중단체 등을 구축하는 대남 조직공작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테러와 암살 등 특수공작 임무도 수행하는 전천후 공작부서다. 1983년 9월 대구에서 발생한 대구 미 문화원 폭파사건을 주도하고 1997년 2월 분당에서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을



▲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 북한군 정찰총국이 주도한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에 사용된 잠수함.

암살한 공작원들이 문화교류국 소속이다.

2009년 초에 신설된 북한군 정찰총국에는 여러 개의 공작부서들이 있다. 대표적인 부서인 정찰국은 대남·대미 군사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기존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국군 내부 와해 및 동조자 포섭 등의 대남공작과 대남도발, 테러 공작도 전개하고 있다. 정찰국 요원들이 감행한 대표적인 테러 행위가 1968년 김신조 등에 의한 1·21 청와대 습격 미수사건과 1983년 10월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그리고 1996년 9월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등이다. 또한 지난 2010년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 씨를 암살하기 위해 3명의 공작조가 탈북자로 위장하고 침투했다가 검거된 바 있는데, 이들도 정찰국 소속이었다.

정찰총국이 신설되면서 편입된 작전국은 원래 '작전부' 명칭을 갖고 있던 노동당 대남공작부서였다. 남한이나 해외에 침투하는 공작원들을 현지까지 안전하게 안내하는 호송 임무와 납치 등을 담당하던 부서인데, 이들은 필요하다면 테러와 암살 등 특수 임무도 수행한다.

또한 '해외정보국' 역시 작전부와 같이 노동당 '35호실'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가 정찰총국으로 이관된 공작부서이다. 35호실은 해외 각국에 공작원을 파견해 북한의 대내외 및 대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 수

집과 요인 테러 및 납치 등을 전담하는 부서였다. 해외정보국이 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 및 '35호실' 명칭을 갖고 있던 시절에 감행한 대표적인 테러 공작이 신상옥·최은희 납치 공작과 김승일·김현희에 의한 KAL기 폭파 사건이다.

이 밖에 북한은 국가보위성에 반탐국과 대외정보국, 남조선국 등을 설치하고 이 부서들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방첩 업무를 주 임무로 하고 있는 국가보위성과 북한군 보위사령부가 탈북자를 이용한 테러 및 정보 수집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정남 암살 공작부서는 해외정보국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작부서가 이번 김정남 암살 작전을 실행한 것일까.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를 종합해보면 총 10명이 김정남 암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각각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여성 2명과 말레이시아 경찰에 검거됐다가 추방된 북한 국적 이정철, 북한으로 도주한 오종길·리재남·리지현·홍송학, 그리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대사관 2등서기관 현광성과 고려항공 직원 김옥일, 북한 국적 리지우 등 북한인 8명이다.

8명이 조직적으로 암살에 가담했고, 또 이들이 신속하

게 북한과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치밀하게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정찰총국 소속 해외정보국일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북한 대남공작부서 가운데 유일하게 해외정보국이 테러를 전문으로 하는 공작조를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해외정보국은 전신인 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 시절부터 '테러조'를 만들어 운영해왔다. 대외정보조사부는 1984년부터 해마다 김정일정치군사대학 졸업생 가운데 다방면적으로 능력이 뛰어나고 특히 격술(擊術)을 잘하는 5, 6명의 인원을 선발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과 함께 사제폭탄 제조법 및 강도 높은 육체훈련을 실시했다. 실제로 필자의 선후배와 동기생 여러 명이 테러조에 선발돼 훈련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암살에 8명이 투입돼 유기적으로 움직였다는 점도 해외정보국 요원들이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는 이유이다. 문화교류국의 경우 테러 전문 공작조가 없으며, 특히 1개 공작조의 인원이 기껏해야 2명이라는 점에서 8명이 유기적으로 움직인 이번 사건과는 활동 방식이 맞지 않는다. 기존 정찰국 요원들이 대부분 현역 군인들이고 일부 인원들이 해외에 무관으로 파견돼 활동한다는 점에서, 또 작전국 요원들은 대남 침투 위주여서 해외에서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 테러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볼 때 김정남 암살을 앞두고 말레이시아에 각각 입국했다가 사건 발생 후 신속하게 북한으로 도주한 오종길, 리재남, 리지현, 홍송학 등 4명이 김정남 테러를 주도한 해외정보국 소속 공작요원일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인원들은 구체적 임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부 지시에 따라 단순히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북한군 정찰총국장이던 김영철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 기용된 후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해외정보국을 노동당 산하로 다시 편입시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의 주범인 김영철이 이번 김정남 암살작전을 주도한 셈인데, 김영철의 호전적인 기질을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이번 김정남 암살사건으로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측근들은 물론 자신과 피를 나눈 혈육까지도 사정없이 제거하는 김정은이야말로 돌도 없는 잔인한 독재자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김정은이 자신의 이복형까지 잔인하게 암살한 것은 오히려 김정은 세습정권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이 세습체제 유지를 위해 이복형까지 백주에 암살하는 반인륜적 잔학 행위를 감행했으나 이는 오히려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것이다. **NUAC**



태양절을 맞아 북한 주민들이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찾고 있다.

3대 세습 정당화 위해 김일성 생일 최대한 활용

북한에서 4월은 가장 바쁘고 중요한 달이다. 4월 15일은 김일성의 생일로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이고, 4월 25일은 건군절이기 때문이다. 김일성 생일 105주년, 김정은 세습 5주년을 맞은 올해 북한 주민들은 더 바쁘고 힘든 4월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4월이면 봄의 문턱에서 형형색색의 꽃들이 지천에 피어난다. 진달래와 벚꽃이 만개해 계절의 싱그러운 변화를 여지없이 느낄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맘때다. 한겨울 내내 얼어 있던 땅이 녹고 푸른 싹들로 마음까지 설레는 계절이다. 계절의 싱그러움만큼이나 4월은 새로운 출발과 기대로 가득한 날들로 기억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4월 하면 최대 명절로 기념되며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은 행사들로 채워진다. 4월 15일은 김일성의 생일로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로

기념하며, 4월 25일은 건군절로 의미를 부여한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북한 사회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은 국가 명절로 지정돼 북한 주민들에게 충성심과 체제결속력을 다지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미 사망한 지도자의 생일이 국가적 차원의 최대 명절로 기념되는 것이다. 매년 김일성의 생일을 맞는 4월이면 북한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대대적인 행사가 국가적 차원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에서는 특히 5년, 10년 단위를 주기로 이른바 꺾어

지는 해를 기념하는데 2017년은 김일성 생일 105주년이며 건군 85주년을 맞는 해다. 더욱이 올해는 김정은 집권 5년 차를 맞는 해로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3년이 지난 1997년에 '태양절'로 제정됐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권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강조하는 '유일사상 10대원칙'에 따르면 김일성은 무오류에 기초한 신과 같은 존재다. 그런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북한 정권으로서는 김일성의 사망이 곧 정치적 생명이 끝난 게 아니라 영생불멸한 지도자의 존재로 영원하다는 정치적 이미지가 필요했다.

결국 김일성 사망 3년이 지난 시점에 태양절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명절을 지정하고 이날을 대대적인 축제일로 승화시켜 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 독재의 명분을 강화했다. 북한에서 김일성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라 칭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태양절은 정권의 지속성과 체제 결속을 다지고 우상화하는 최대의 정치적 선전 수단으로 활용된다. 김일성이 육체적으로는 사망했지만 사상적으로는 영생불멸한 존재로 주입되어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태양절, 정권 정당성·우상화 위한 정치 선전 수단

김정일 시대에 들어 태양절은 정치적인 의미로 격상돼 대대적인 행사와 축제 등으로 치러졌다. 태양절을 기념해 4월 한 달 동안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과 태양절 경축 서예축전, 국가산업미술전시회, 김일성화 전시회, 국제마라톤 대회 등 대내외적인 각종 행사가 개최됐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김일성 생일 70돌을 맞은 1982년부터 시작돼 해외 각국의 예술인들을 초청해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김일성이 세계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정치적 의미를 담아 세계 각국의 예술인을 초청해 공연을 개최한다. 축전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제·국내 콩쿠르 수상자들과 이름 있는 명배우들로 구성된 예술단, 무용단, 교예단 그리고 해외동포 예술단들이 참가한다.

국제마라톤 역시 태양절을 기념해 개최되는 대표적인 국제 행사 중 하나다. 한때 태양절을 기념해 북한을 방문하

강 동 완 — 동아대 정치과 교수



성균관대 정치학 박사.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심사위원 역임. 현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국무조정실 국정과제평가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통일문화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저서 〈사람과 사람 : 김정은 시대 북조선 인민을 만나다〉, 〈한류, 북한을 흔들다〉 외 다수

는 해외 여행상품이 판매될 정도로 태양절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치적 의미는 남다르다 할 수 있다.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해서 태양절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김일성이 절대적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 4월에는 3대 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북한 주민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전과 다른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됐다. 무엇보다 김정은 집권 초반기인 지난 2012년은 김일성 생일 100년을 맞는 해로 대대적인 열병식까지 열었다. 이 열병식에서 북한은 이전에 한 번도 시험발사한 적이 없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는 김정은 집권 초기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이전 김정일 시대로부터 강조되었던 선군정치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지도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였다.

김정은 집권 5년 차를 맞는 2017년 4월은 북한 정권에서 보면 더욱 그 의미가 남다르다. 4월 11일과 13일은 각각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5주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정은으로서는 지난 5년간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면서 강력한 지도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과제가 있다. 나이 어린 젊은 지도자에 대한 반감을 잠재우고 3대 세습에 대한 정당성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태양절 행사는 백두혈통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외정세 역시 북한 정권으로서는 급변하는 상황적 변



북한의 내면을 담은 다큐멘터리 '태양 아래'.

국가 최대 명절로 지정된
태양절답게 4월 한 달간은
대대적인 행사로
축제 분위기가 조성되지만
사실 북한 주민들에게
4월은 동원과 성과 달성에
따른 부담으로 힘겨운
시기가 될 수밖에 없다.

화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면서 '전략적 인내'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맞는 4월 태양절은 국내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독려하고 대외적으로는 군사적 과시를 통해 체제 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려 할 것이다. 결국 2017년 4월 태양절을 맞는 북한은 이날을 지난 김정은 시대 5년에 대한 총체적인 성과를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한 정치의 장으로 이용할 것이다.

국가 최대 명절로 지정된 태양절답게 4월 한 달간은 대대적인 행사로 축제 분위기가 조성되지만 사실 북한 주민들에게 4월은 동원과 성과 달성에 따른 부담으로 힘겨운 시기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3월 16일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이 평양 여명거리 건설 현장을 방문한 내용을 보도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에 맞춰 완공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정은이 건물 안에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정관 인민무력성 부상,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등의 보고를 받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사진에서는 김정은의 외투 복부 부분에 흰색 페인트가 묻어 있는 모습까지



1 태양절을 맞아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화 전시회. 2 김정은이 태양절을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방문하고 있다. 3 조선인민군 창건 경축 중앙보고대회. 4 조선인민군 창건 경축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한 북한 군인들.

볼 수 있었다.

다음 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여명거리 건설 현장을 찾아 “태양절까지는 이제 30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전체 건설자들이 마지막 결승선을 향해 질풍노도처럼 내달림으로써 여명거리를 노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우자”고 독려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싱그러운 봄을 즐기는 4월은 언제쯤일까

평양 여명거리는 김정은 시대의 최대 성과로 자랑하는 것 중의 하나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초고층 살림집(아파트) 등을 조성하고 있는 곳이다. 김정은의 지시로 지난 2016년 4월 초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인근에 착공한 아파트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를 비롯한 과학자, 연구사들이 살게 될 살림집과 탁아소, 유치원, 세탁소 등의 공공건물로 짓고 있는 곳이다. 이번 태양절에 맞춰 평양의 중심

부에 자신의 업적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보여주려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4월 25일 건군절 85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미국을 겨냥한 ICBM과 핵실험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예고되고 있다. 이는 결국 김일성과 김정일의 후계자로서 손색이 없음을 대내적으로 강조하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사망한 지도자의 생일을 국가의 최대 명절로 지정하고, 또 그 후계자가 생일에 맞춰 자신의 권력 승계를 정당화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북한 사회의 모습 이면에는 강제적 동원으로 힘겨워하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담겨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4월 그 찬란한 계절의 시작이, 한 사람을 위한 태양절로 기념하는 달이 아니라 새봄의 전령사로 맞이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본다. 통일시대 봄처럼 싱그러운 4월의 한반도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NUAC**



중국 관광객이 사라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모습.

치졸한 중국의 ‘경제 압박’ 중국 의존 줄이는 계기 삼아야

중국의 사드 보복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한한령(限韓令) 등으로 콘텐츠 규제가 심각하게 이뤄지는 것은 물론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수출입 통관 지연 등 경제 압박도 점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반한 감정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잇따라 사드 배치 반대 논평을 내고 있으며, 중국 언론은 비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인의 중국 비자 받기가 깎간해졌다. 중국은 중국 정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초청장에 한해서만 상용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등 지방정부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20% 감축령이 내려졌다는 소식도 있다.

한한령 등에 따른 콘텐츠 규제 또한 심각하다. 한국 드라마, 영화의 TV 방영은 물론 한국 연예인의 TV 출연, 공연, 광고 등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임산업은 대중국 콘텐츠 수출의 71.4%를 차지하며, 20조 원 규모의 중요한 시장이지만 2016년 7월 중국이 ‘판호(版號)’를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하면서 대중국 수출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중국은 노골적으로 한국 기업을 골탕 먹이고 있다. 수입 인증 및 검역 강화와 수출입 통관 지연 등 한국의 대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동아대 경제학 박사. 합참 북한정보본부 자문위원, 남북경제인협회 부회장 역임. 현재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개성공단기업협회 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저서 <통일, 기업에 기회인가 위기인가> 등

중국 수출에 보이지 않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3월 8일 설치한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에는 피해 건수가 열흘 동안 60개사 67건이 접수됐다.

피해 사례는 통관 지연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보류·파기, 불매, 대금 결제 지연, 행사 취소 및 홍보 금지 등의 유형이었다. 중국의 롯데마트도 99개 지점 중 90개가 영업 중단 상태다. LG화학과 삼성SDI는 2015년 11월 1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 규준에 탈락한 이후 2016년 6월 4차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업체를 차별화하고 태양광 전지 원료 반덤핑 재조사에 착수해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의 주력 기업 때리기도 본격화됐다. 2016년 12월 29일 중국 공업·신식화부에서 발표한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차량’ 목록에서 한국 업체의 배터리를 장착한 5개 모델을 제외했다.

중국의 ‘등가 대응’(Tit-for-Tat) 전략

중국은 세무조사로 한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2016년 12월 중국 정부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의 중국 전 사업장에 대해 세무·소방·위생·안전점검에 나섰다. 상하

이 롯데 중국본부는 설립 4년 만에 구(區) 단위가 아닌 상하이시가 직접 조사하는 최대 규모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백화점 등 10여 개 계열사에 대해 동시다발적 조사가 이뤄졌다. 올 2월 중국 정부는 3조 원 규모의 선양 ‘롯데타운 프로젝트’를 소방점검 사항을 문제 삼아 공사를 중단시켰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한국 주식 투자는 몇 개월 연속 감소했다. 2016년 12월 상하이 시영 투자기관 ISPC (International Sourcing Promotion Center China)는 투비소프트에 1억 달러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하는 투자 합의각서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이런 집중 포화는 처음이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중국이 트집을 잡고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대놓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 산업 보호 차원이라고 변명하지만, 누가 봐도 한국에 대한 분풀이로 여길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가 진전될수록 중국의 경제 보복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드 배치가 한 단계 진전될

시나리오별 중국의 경제 보복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단위 : 억 달러)

자료 : IBK경제연구소

		상품 수출	관광	콘텐츠	합계
시나리오1 (Bad)	부가가치	41.4 ↓	31.0 ↓	9.2 ↓	76.9 ↓
	GDP 기여도	0.30%p ↓	0.23%p ↓	0.07%p ↓	0.59%p ↓
시나리오2 (Worst)	부가가치	82.7 ↓	46.5 ↓	18.3 ↓	147.6 ↓
	GDP 기여도	0.60%p ↓	0.34%p ↓	0.13%p ↓	1.07%p ↓

* (시나리오 1) 상품 수출 5%, 관광객 20%, 콘텐츠 부가가치 10% 감소

* (시나리오 2) 상품 수출 10%, 관광객 30%, 콘텐츠 부가가치 20% 감소

때마다 보복 수위를 높이는 ‘등가 대응(Tit-for-Tat)’ 전략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가 최종적으로 한국 내에 설치된다면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되고 반한 감정도 확산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과 관광산업 등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의존도(45.9%)가 높고, 특히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26.0%)가 높아 대중국 수출 둔화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거의 절반이 중국인이어서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통제는 한국으로서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특히 면세점의 경우 전체 매출(106억 달러)의 72%를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고, 외국인 매출(76억 달러)의 대부분이 중국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서 손실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4대 면세점 기준으로 중국인 관광객 매출액(5조 원)은 전체(8조1000억 원)의 62% 이상, 외국인 관광객(5조8000억 원)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대형마트에서 롯데 제품을 진열대에서 철수시키고 있다.

2014년 기준 콘텐츠산업 지역별 수출액을 보면, 일본(16억 달러, 비중 31.2%)에 이어 대중국(13억4000만 달러, 비중 26.2%) 수출이 2위를 차지하고 있어 금전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IBK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대중 수출과 관광·콘텐츠산업이 타격을 받으면 한국의 경제성장에 0.59~1.07%포인트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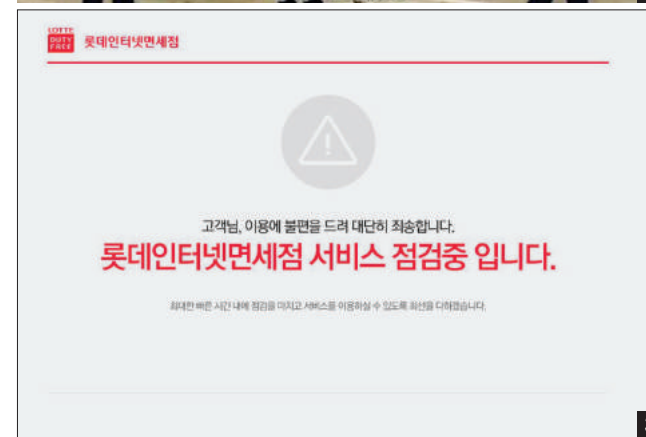
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외에도 고용 창출, 신규 투자,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 감소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그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수출과 관광·콘텐츠산업이 위축되면, 고용 및 투자가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민간 소비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중·일관계 악화로 얻은 반사이익(중국의 2012년 수입 2위국에서 2013년 1위국으로 도약)에 대한 기저 효과까지 감안하면 그 영향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은 웅졸한 행위

중국의 경제 보복은 웅졸한 것이다. 사드 배치에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외교력으로 풀어야 한다. 경제와 연계한 보복조치는 주요 2개국(G2) 국가답지 못한 일이다. 외교적 갈등으로 민간 기업에 보복하는 방식은 공정한 자유무역과 시장 질서를 흔드는 부당한 행위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출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하다.

한국에 대한 선부른 경제 보복은 중국에 부메랑으로 돌아가 자국 기업의 이익을 해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네 번째 수출 대상국이자 중국이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다. 우리가 맞대응에 나서면 그만큼 중국도 타격을 입게 된다.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10%(2016년 기준)로 1위다.

중국은 연간 1587억 달러 어치를 한국에서 수입한다. 이 가운데 78.4%가 중간재다. 한국과 중국 간 산업은 분업구조로 돼 있고, 중국 소비자의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연간 한국에 투자하는 금액(2016년 기준 20억5000만 달러)의 두 배 이상인 44억 달러를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



- 1 중국인들이 '롯데제제' 등의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 2 롯데 제품 배척운동을 하는 중국인들.
- 3 디도스 공격으로 서버가 다운된 롯데 인터넷 면세점 홈페이지.
- 4 중국에서 현대차를 파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 파고에 대해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외교와 경제는 더 챙겨야 한다.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하고, 외교력을 발휘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대응 컨트롤타워 체계 갖춰야

중국의 경제 보복이 계속되자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 중국 측 조치가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에 위배됐을 가능성을 WTO에 공식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외교적 협상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국의 수입 1위국으로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인 점을 적극 활용해 표면적으로 중국 정부의 구겨진 체면은 살려주되 양국의 경제적 실리는 취할 수 있는 협상안이 바람직하다. 민간 차원에서

라도 반한 감정 확산은 막을 수 있도록 한국에 대한 이미지 홍보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밀한 대책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지만,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작은 비관세 장벽만 치더라도 바로 중소기업에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다.

중국의 경제 보복에 우리 중소기업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고, 정부도 보복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에 수출하거나 진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 기업의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과도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국 경제의 미래도 있다. **NUAC**



美 ‘아시아 중시정책’과 中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충돌

〈一帶一路〉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대만과 미국은 물론 필리핀 등 인접국들까지 확산되고 있다.
영토 문제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특히 한반도 통일 환경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살펴본다.

바다는 육지에 딸린 것으로 바다 그 자체만으로는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인접한 육지나 섬을 관할하는 자가 바다를 지배하게 된다. 바다는 육지의 아들인 것이다. 바다를 확보하기 위해 수역에 인접한 땅과 섬의 소유(영유)가 중요해졌다. 한일 간의 독도 문제 역시 같은 맥락이다.

1982년 5월 성립된 해양법협약에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인정되면서 바다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근대 이전 직접적인 관할권이 모호했던 섬의 영토주권을 둘러싸고 동아시아가 격랑에 휩싸여 있다. 특히 남중국해(South China Sea)는 중국 및 연안 국가들이 각자 관할권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고, 미국이 자유항행을 천명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다. 남중국해를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중국과, 주변국 및 미국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가고 있다.

이 성 환

계명대 인문국제학대학 교수



일본 쓰쿠바대 정치학 박사.
대한정치학회 부회장, 동아시아
아동학회 회장, 동북아역사
재단 자문위원 역임. 현 국경
연구소 소장

남중국해는 말라카 해협, 롬복(Lombok) 해협, 순다(Sunda) 해협으로 통하는 해상 루트이다.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수입하는 석유의 70% 이상, 세계 교역량의 50%가 통과하는 이 해역은 경제·군사적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 해역에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양의 천연자원은 연안국(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7개국) 간에 이곳 도서에 대한 귀속권과 해양경계선 획정을 둘러싼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와 중국의 팽창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이 1947년 U자 형태의 9개 선(九段線)을 중심으로 남중국해 전체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한 데서 출발한다. 그 후 연안국 간에는 이 해역의 도서 영토주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으나, 2002년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1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 in South China Sea)에 합의하면서 다소 소강상태를 보였다. 중국이 분쟁을 미루고 공동 개발 전략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아시아 중시정책(Asia Pivot Policy)을 전개하면서 남중국해는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기 시작했다. 2011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막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세력으로서 이 지역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시기 힐러리 미 국무장관은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에 실린 ‘미국의 태평양 세기(American’s Pacific Century)’라는 글에서

아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했다.

아시아 중시정책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압도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고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로 회귀한 것이다.

이에 대해 2012년 1월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은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하고,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나눠 써도 충분할 만큼 넓다”며, 미국의 아시아 회귀에 반발했다. 서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보장과 함께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접근 불용(接近不容)을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둘러싸고 구체화되었다.

미국에게 남중국해는 아시아의 군사기지와 중동지역, 인도양을 연결하는 세계 전략의 요충지이자 중국 견제의 길목이며, 이곳에서의 자유항행의 확보는 미국 군사력의 아시아 침투에 필수적 사항에 해당한다. 반면 중국 입장에서는 남중국해의 주요 해협은 중국 해군이 대양으로 진출하는 통로이며,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무역로이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세계전략의 하나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의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선이다. 또한 이 해역에 매장돼 있는 자원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중국에게 남중국해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핵심이익(Core Interest)이 걸려 있는 곳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의 세계전략(패권) 즉, 미국의 아시아 회귀와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가 직접 맞부딪치는 곳이 되었다. 중국이 누가 봐도 무리하게 보이는 남중국해 전체



중국의 남중국해 불법 점유를 규탄하는 베트남 교민들.

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공세는 2013년도부터 파라셀 군도(시사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난사 군도)를 중심으로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표면화됐다. 중국은 2013년 존슨 암초(赤瓜礁)의 매립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피어리 크로스 암초(永暑礁)와 수비 암초(渚碧礁), 미스치프 환초(美濟礁) 등 7개 암초의 매립에 착수했다. 특히 미스치프 암초는 필리핀에서 1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3000m의 활주로와 4개의 격납고도 갖췄다.

남중국해 인공섬과 중재재판소 판결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해 2015년 1월 미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연안국들과 함께 중국을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를 지키기 위한 군사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7월부터는 일본도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군사기지화는 공해(公海)에서의 비행의 자유와 항행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경고하면서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10월에는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해 중국의 인공섬 12해리 내에 이지스 구축함을 진입시켜 인공섬을 무력화하는 군사행동을 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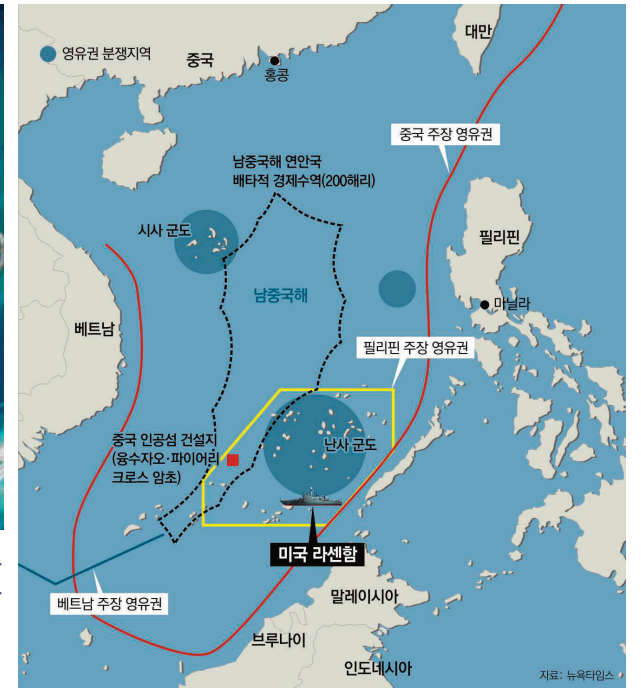
한편 필리핀은 2013년 1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관할권을 부정하는 취지로 중국을 국제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다. 2016년 7월 국제중재재판소는 중국의 9단선과 인공섬을 부정함으로써 중국의 남중국해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국은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중재재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인공섬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근접방공시스템(CIWS)을 설치하는 등 더욱 공세적인 조치를 취했다. 9월에는 남중국해에서 러시아와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했다. 2016년 12월 26일에는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황해와 서태평양을 거쳐 남중국해에 파견했다.

국제사회는 중국에 대해 법의 지배와 항행의 자유를 요구하고, 미국과 일본은 무력으로 중국 견제에 나섰다. 2015년 4월 미국과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남중국해로 넓혔다. 2016년 6월에는 미국, 인도와 함께 말라바르 훈련을 실시하고, 인도네시아와는 ‘코모도 2016’ 훈련을 벌였다.

일본은 2017년 1월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베트남에 순시선 6척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6월에는 인도, 미국과 함께 실시하는 연합훈련에 준 항공모함 이즈모를 파견하기로 했다. 미국은 2017년 2월 18일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남중국해에 파견



▲ 중국이 남중국해 난사 군도 용수자오 섬에 건설한 군사시설.
▶ 남중국해에 대한 인접국가들의 영유권 주장 지도.



해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그 후 칼빈슨호는 오키나와 부근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고, 3월에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에 참가했다. 그리고 미국은 얕은 수심과 복잡한 해로를 가진 남중국해의 지형에 적합한 연안 전투함 두 척도 싱가포르에 배치했다.

남중국해와 한반도

이처럼 남중국해는 중국의 핵심이익과 미국의 항행의 자유가 직접 충돌하는 격전장이 됐다. 국방력 강화를 통한 힘의 지배를 추구하고 있는 미 트럼프 정권의 남중국해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는 2017년 국방수권법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군 장성 교류를 포함해 대만과의 군사교류 강화조치를 취했다.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고 대만과 관계 강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도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무역 마찰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예견되는 가운데, 그 시작은 남중국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국무장관에 지명된 렉스 틸러슨은 1월 11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인공섬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종래

의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2월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남중국해에서 군사시위를 하고, 오키나와에서 자위대와 합동 군사훈련을 가진 후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에 참가한 것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아세안을 비롯한 전통적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미국과 보조를 맞춰 이 지역의 분쟁 구조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한국도 이 지역의 안전을 위한 미국의 행동에 동참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 말라카 해협은 한국이 석유와 수출입 물자를 수송할 때 꼭 거쳐야만 하는 생명선이고, 한미동맹을 고려하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중국해의 도서 귀속과 관할권을 둘러싼 연안국들의 갈등은 실질적으로는 미·중의 대결로 귀결되었으며, 이는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냉전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관여는 중국과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의 통일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잡힌 군사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NUAC**



1 평양에서 열린 패션쇼.
2 평양의 고층아파트 숲.
3 평양 시내를 배추트럭을 타고 이동하는 군인들.

같은 평양 맞아? 너무나 다른 생활수준

평양은 북한 주민들 중에서도 선택받은 사람들만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안에도 빈부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류층은 집 전화가 2가구에 1대 꼴인 반면, 상류층은 가구당 휴대전화가 6대에 이른다. 그 실상을 들여다보았다.

| 박인옥 서울연구원 평양특별위원 |

평양은 북한에서 주체의 성지이자 조선 인민의 심장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신성한 지역이다. 특권기관인 중앙당을 비롯해 인민무력성, 국가안전보위성, 인민보안성, 내각 등이 평양에 소재한다. 이러한 특권기관 산하에는 무역회사가 800여 개 존재하며, 한국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 자산가도 100명이나 있다고 한다. 특히 평양에는 유명한 김일성종합대학교와 김책공업종합대학교 등 총 22개의 대학이 있다. 그야말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아닐 수 없다.

현재 평양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김일성광장 주변의 특권층 거주지역인 창전거리에 고층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평양 중심부에 미래과학자거리가 완성되었다. 현재는 대성구역의 여명거리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또한 상업 서비스망이 활기를 띠고 있다. 시장, 외화 상점, 고급 음식점 등 다양한 상업망이 발달하고 있다. 중국 자본이 투자된 복합적인 상업망도 평양 중심지역에 건설되고 있다. 이는 평양에서 이러한 상업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요층이 두껍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수요층은 주로 평양의 특권기관 간부들과 이러한 권력을 활용하는 자본가들, 무역회사 직원, 시장 상인, 대학생들과 교수들이 주 고객이다.

상류층 가구당 평균 휴대전화 6대

평양 출신의 탈북자 심층면접을 통해 평양시 인민들의 생활 실태를 분석해보면 하류층과 상류층이 몇 가지로 구분·비교된다.

첫째, 일상생활 영역이다. 하류층은 아파트 평수가 7~12평(방 1, 화장실은 공동화장실, 난방은 석탄)이며 하루에 전기는 2~3시간, 수돗물은 1~2시간 공급된다. 하류층은 매우 열악하게 살아가며 집이 없어서 분가를 하지 못한 자녀와 같이 사는 대가족이 많다. 반면 상류층은 아파트 평수가 40~50평대(방 3, 화장실 1, 난방은 연탄보일러)이며 하루에 전기는 20~23시간, 수돗물은 24시간 공급된다.

둘째, 경제생활 부문이다. 평양에서는 지방과 달리 아직도 국가 배급이 한 달 기준으로 15일 분량 정도 나온다. 하류층은 가계소득에서 국가 배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10.5%에 달한다. 나머지 89.5%는 월급이나 기타 소득으로 생활한다. 반면 상류층은 가계소득에서 국가 배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0.1%도 안 된다. 국가에서 주는 배급은 질이 안 좋기 때문에 받지 않고 가난한 친척이나 이웃에게 준다고 한다. 그들은 시장이나 외화 상점에서 질 좋은 것을 구입해 살아간다.

하류층은 20가구 기준으로 집 전화 10대, 휴대폰 3대, 컴퓨터 2대, 자동차 0대이다. 반면 상류층은 10가구 기준으로 집 전화 10대, 휴대폰 60대, 컴퓨터 20대, 자동차 10대가 있다.

셋째, 직업의 종류이다. 하류층은 오늘 장사를 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 내일은 굶을 수밖에 없는 최빈곤층으로 대부분이 농민, 노동자 출신들이다. 이들은 자본금이 없으며 공터나 길거리에서 물품을 파는 메뚜기 시장이나 골목장

에서 소소하게 채소장사, 음식장사, 석탄장사를 한다. 다른 직업으로는 오물장 정리, 청소, 가내반(가내 수공업장) 생활,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국영 공장·기업소의 노동자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국영 공장·기업소에서 생활을 잘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지방으로 쫓겨나고 지방의 자본가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평양에서는 잘사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증가했다. 또한 평양의 정년퇴직자들은 할 일이 없어 아파트에서 돼지와 닭을 기르거나 스스로 지방으로 내려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양극화

현재 평양 주민들은 남한의 1985년 정도의 생활상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다. 지방 농촌은 1960~70년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양은 계층별로 상류층이 30%, 중류층이 30%, 하류층이 40%로 구성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상류층과 중류층 60%는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는 계층이고 하류층인 40%는 최빈곤 상태로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평양에서는 간부로서 특권을 갖고 시장경제의 네트워크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은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상류층이다. 반면에 권력이 없고 시장경제의 최말단에 있는 순수한 농민, 노동자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미래가 없는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다. **NUAC**

힘의 논리를 부도덕하게 보는 전통이 조선 왕조를 파멸로 이끌었다

능력 본위로 인재를 등용하려면 당파의 힘을
월등히 뛰어넘은 강력한 왕권이 있어야 했지만 뛰어난
임금이었던 영조와 정조조차 그럴 힘이 없었다.
그래서 당쟁을 극복하기 위한
탕평책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고,
바로 이것이 조선 왕조의 불행이었다.



영화 '사도세자'에서 영조(송강호 분)의 모습.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안해서 다른 사람들과 모여 하나가 되고 싶어 하지만, 정작 모이기만 하면 돌로 혹은 넷으로 쪼개져 싸우기 시작한다. 통합이 분열을 낳고, 사랑이 싸움을 낳는 셈이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것은 물론이고, 친구나 연인이 되고 나서도 그다음에 하는 일 또한 필시 싸움이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싸움판이다.

분열과 싸움의 원인은 “내가 옳다” 혹은 “우리가 옳다”는 생각에 있다. ‘나’ 혹은 ‘우리’ 중심의 생각, 다시 말해 ‘내’가 혹은 ‘우리’가 잘났다는 바로 그 생각이 분열과 싸움을 낳는다.

그렇다고 분열과 싸움이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서로 잘난 체하기 경쟁은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 역사와 문명은 전쟁을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경우가 많았다.

‘나’ 또는 ‘우리’가 옳다는 확신

분열과 싸움을 굳이 권장할 필요는 없다 해도 도덕의 눈으로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것은 유치하다. 사람은 너 나 할 것 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걸 나무라는 안 된다. 분열과 싸움은 도덕적 선도 아니고 도덕적 악도 아니다. 조선시대 당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한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을 둘러싸고 싸움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도무지 비현실적이다. 당쟁에 대해 도덕적 잣대부터 들이대는 자세부터 고쳐야 한다. 당쟁 없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당쟁은 자연스러운 정치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당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이다. 당쟁이 조선 사회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 지겹도록 싸움만 하고 현실적으로 아무런 생산적인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다면 그때는 비판해도 좋을 것이다. 싸움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도덕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도덕의 눈 대신 현실과 실용의 눈으로 조선시대 당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영조와 정조가 당쟁의 해

최진덕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서강대 철학 박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관장. 한국학대학원 대학원장 역임. 저서 <주자학을 위한 변명>, <인문학, 철학, 그리고 유학> 등

결책으로 제시한 탕평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미 밝힌 바 있듯이, 당쟁의 근저에는 권력, 토지, 명예, 돈 등 현실적 이익을 노리는 가문과 학파와 당파의 각종 이기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기심만으로는 당쟁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당쟁에는 이기심을 넘어서는 이념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임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적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이기심을 넘어 숭고한 이념을 추구하기도 한다. 사람은 그래서 복잡하다.

그런데 숭고한 이념이 속물적인 이기심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조선시대 당쟁 또한 그런 경우에 속한다. 만약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기심에만 충실한 경우에는 뜻밖에도 싸움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이익만 생각한다면 타협을 통해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이익을 서로 적당히 나누고 싸움을 피할 수 있다. 설령 타협이 잘 안 되어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영조의 어진(초상화).



정조는 탕평책의 하나로
퇴계의 학덕을 기리는
특별 과거시험인
도산별과를 실시했다.

힘으로 제압해 싸움을 빨리 끝낼 수 있다.

그러나 이기심보다 이념적 동기를 앞세우게 되면 싸움은 불가피해질 뿐만 아니라 장기화될 위험이 커진다. 숭고한 이념을 추구한다고 확신할 경우에 ‘나’ 혹은 ‘우리’가 옳다는 확신이 견고해져 남들과의 타협이 어려워지고, 힘이 약해 패배하더라도 승복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당쟁의 주역들은 대개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한 지주이자 노비주였지만 권력 추구를 업으로 하는 정치꾼도 아니고 경제적 이익에 눈먼 시정잡배도 아니었다. 그들은 공맹과 주자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힌 이념 지향의 점잖은 도학군자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혹은 ‘우리’는 옳다는 아집이 누구보다 확고했다. 바로 이것이 붕당이 형성되고 당쟁이 시작된 진짜 원인이었다.

퇴계나 율곡과 같은 도학군자들은 당쟁이란 소인배들이나 하는 ‘나쁜 짓’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16세기 후반 훈구세력을 척결하고 집권을 시작하자마자 붕당을 만들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이 싸움은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수백 년 동안 계속되었다.

도학군자들은 싸움을 하더라도 주먹으로 하지 않고 말로 했다. 말로만 하는 싸움은 끝을 내기가 쉽지 않다. 주먹은 한 방이면 상대방을 바닥에 눌힐 수 있지만 말은 아무리

독해도 상대방을 죽일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말싸움에서는 한번 지더라도 돌아서서 다시 생각해보면 새 논리를 개발하기가 어렵지 않다. 당쟁이 격화되면 간혹 공권력을 동원해 옥사를 일으켜 상대방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당쟁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수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하면 경미한 수준이었다. 권좌에서 물러나더라도 죽을 염려가 별로 없으니 말로 하는 도학군자들의 당쟁은 겁도 없이 대를 이어 끈질기게 계속될 수 있었다.

백성의 삶과 별 상관없던 조제보합론

조선시대 당쟁은 어떤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왔는가. 조선의 역사와 문명을 발전시켰는가. 도학군자들은 입만 열면 백성을 위한 정치를 주장했지만 당쟁 덕에 백성의 삶이 개선되었는가. 이런 물음에 긍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친 다음에도 당쟁은 더 격화되었지만 그 결과는 주자학을 교조적으로 숭상하는,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철저한 유교국가의 등장뿐이었다. 각 당파들이 유교 윤리와 주자학의 가르침을 근거로 상호 비판을 거듭하다 보니 백성의 삶과는 무관하게 조선의 유교화 내지 주자학화(化)만 자꾸 심화돼갔다.

탕평에 대한 요구는 당쟁이 시작되자마자 싸움을 나쁜 짓으로 보는 도학군자 자신들의 입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

작했다. 당파에 구애받지 말고 공정하게 인재를 등용해 사림을 통합해보자는 율곡의 이른바 조제보합론(調劑保合論) 즉 조정과 통합의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율곡 자신부터 서인의 당파성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당파성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그의 조제보합론은 백성의 삶과 별 관련이 없는 도학군자들끼리의 조정과 통합에 지나지 않았다. 끼리끼리 갈라먹기 식의 조제보합보다는 어떤 정책이 백성을 위해 가장 좋은 정책인가를 두고 필사적으로 싸웠더라면 결과는 어땠을까.

하지만 그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기대였다. 분열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한, 도학군자들의 정책 대안은 늘 허공에 뜬 수밖에 없었다. 주자학적 이념의 핵심에는 ‘사람의 본성은 착하다’라는 맹자의 성선설이 있는데, 도학군자들은 치열한 당쟁의 와중에서도 성선설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 자가당착을 범했다. 착한 본성에 대한 일체의 외적 강제는 모두 도덕적 악이기 때문에 성선설에 100% 충실하다면 국가도, 국왕도 필요하지 않다는 식의 무정부주의의 낭만에 빠질 수 있다.

‘왕권 강화=패도(霸道)’라는 인식

분열과 싸움이 불가피한 세상의 현실 속에서 쓸데없는 당쟁을 극복하고 공평한 인사를 하려면 왕권 강화가 유일한 해법이었지만 도학군자들은 임금에게 도덕적 수양만 요구할 뿐, 왕권 강화를 주장하지 않았다. 도덕적 수양의 요구는 왕권에 대한 견제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왕권을 약화시킬 공산이 크다. 실제로 조선의 왕들은 왕이라 부르기 민망한 수준의 권력밖에 행사하지 못했다. 왕권이 약하니 신권이 강해지고 신하들 간의 당쟁이 빈발할 수밖에 없었다. 도학군자들은 조정에 들어가 왕의 신하가 된 다음에도 주자학의 이념에 따라 신하가 해서는 안 될 월권 행위를 자행했다. 붕당을 만들고 당쟁을 벌이다가 구미에 맞지 않는 왕이 있으면 반정이란 명분으로 내쫓기도 한 게 바로 그것이다.

이념을 명분으로 하는 도학군자들의 월권적 당쟁을 잠재우는 대신 생산적인 싸움을 자극해 백성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왕권 강화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왕권강화론은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는 순자의 성악설에 근거해 폭력까지 용인해야 하므로 자칫하면 패도(霸道)라는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

세자 시절부터 도학군자로 교육받은 조선의 왕들 역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탕평비. 영조가 직접 글을 써서 세운 비다.

시 왕권 강화를 대놓고 선언할 처지가 아니었다. 영조와 정조는 그 대신 탕평을 통치의 대원칙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두 탁월한 임금마저 노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당파들 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조정자의 역할조차 제대로 수행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다.

당파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 본위로 인재를 등용하려면 당파의 힘을 월등히 뛰어넘은 강력한 왕권이 필수적이지만 조선 후기에는 그런 임금이 없었다. 그래서 당쟁을 극복하기 위한 탕평책은 모두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것이 조선 왕조의 불행이었다. 왕권 강화는 왕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힘의 강화를 뜻한다. 국가의 힘이 강해야 특권층의 발호를 막고 힘없는 백성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힘의 논리를 도학군자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다.

힘의 논리를 부도덕하게 보는 전통은 오늘날 한국의 지식인들에게도 고스란히 유전되고 있다. 아름다운 이념이 아름다운 현실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름다운 이념보다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추악한 현실이 더 중요하고, 이 추악한 현실 속에서는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이것이 조선 왕조의 실패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엄숙한 교훈이다. **NUAC**

“요벨은 탈북 청년들의 자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입니다. 탈북민 청년과 남한 청년, 디아스포라 해외 교포들이 함께 투자해 설립한 회사죠. 2014년 첫 비즈니스로 카페 창업을 시작한 데 이어 탈북민 정착을 돕는 다양한 비즈니스를 발굴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요셉(35) 대표는 탈북민 출신 최초의 사회적 기업가다. 그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요벨'은 남한 사회에 이제 막 발을 디딘 탈북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돕고 있다. 남북 청년을 함께 고용하기 때문에 일종의 화합의 장이 되기도 한다. 덕분에 탈북 청년들은 자연스레 남한 문화를 수용할 기회를 갖고, 남한 청년들은 탈북민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된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자립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왔죠. 탈북민을 돕는 몇몇 기업이 있긴 하지만 남한 사람들이 설립하고 탈북민들을 고용하는 구조이다 보니

(탈북민 입장에서) 자기 주도적인 면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어요. 탈북민에게 의사결정권을 주는 건 어렵거나 하는 생각으로 요벨을 만들게 됐어요.”

요벨의 최대 주주는 5명의 탈북민이다. 이 밖에도 여러 명의 남북한 청년들이 주주로 참여해 주인의식을 갖고 이끌고 있다. 이렇게 설립된 요벨은 2014년 IBK기업은행의 탈북민 창업 지원을 받아 기업은행 수지센터에 사내 카페 '레드체리'를 오픈했다. 이듬해에는 서울 한남동 사옥에 2호점 '스페이스 요벨'을 오픈하면서 요벨의 첫 비즈니스는 순항의 뜻을 달았다.

지금은 어엿한 사회적 기업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박 대표의 초기 정착 시절도 여느 탈북민과 다르지 않았다.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돼 있었고 차별과 무시도 적잖이 받았다.

“많은 탈북민들이 처음 1년 동안은 우울증을 앓는 등 많이 힘들어해요. 저도 그랬죠. 외래어도 못 알아듣겠고

친구도 없고.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대학 진학을 결심한 박 대표는 2006년 건국대 수의학과에 합격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대학 전공을 고를 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 수의학을 선택했어요. 탈북 후 남한으로 오기 전 중국에 머물면서 양치기를 했던 것도 계기가 됐고,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북으로 소 1000마리를 보낼 때 수의사가 소의 건강검진을 맡았다는 이야기를 인상적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수의사가 된다면 나중에 통일이 된 후에도 북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았어요.”

탈북민 일자리 제공하고 농촌 인력난도 해결

이후 대학을 마치고 탈북민 자립을 돕는 일에 뛰어든 그는 요벨을 설립했다. 첫 사업은 진입 장벽이 낮은 카페가 적격이었다. 카페 운영이 안정기에 접어든 요즘, 박 대표는 두 번째 사업을 시작했다. 바로 '요벨팜', 즉 친환경 생태순환 농장 사업이다.

“이제 막 시작한 생태순환 농업은 제가 대학에서 배운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돼지는 돼지 농장에서, 소는 소 농장에서만 기르는 시스템이었다면, 요벨의 생태순환 농업은 목축업과 밭농사, 논농사, 과수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다품종 농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인공 비료 없이 자연 퇴비를 얻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땅도 치유되고 가축들에게도 좋은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게 됩니다. 가축을 대량으로 사육하진 않되 그 땅에서 자랄 수 있을 만큼의 가축과 과수원, 농사를 병행하며 전체적으로 생태를 살리는 농업을 하려고 해요. 거기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꽃 피는 아침마을'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촌 출신이 대부분인 탈북민들에게 좀 더 익숙한 일자리가 되리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자립 해결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그는 자평한다.

박 대표는 생태순환 농업을 통해 1차적으로는 탈북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모델을, 2차적으로는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문제 해결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 이후까지 고려하면 전망이 좋은 아

“카페 이어 생태순환 농업... 탈북 청년 자립 돕습니다”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설립한 사회적 기업 '요벨'은 탈북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박요셉 대표가 꿈꾸는 작은 남북통일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중이다.



1 사회적 기업 요벨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직원들과 함께한 박요셉 대표(왼쪽).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2 IBK기업은행 서울 한남동 사옥에 입점한 사내 카페 '스페이스 요벨'에서



박요셉 씨는 탈북 청년들의 자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요벨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이템이다.

그는 자신도 똑같이 겪었던 좌절과 차별의 고통을 더 이상 탈북민 후배들이 겪지 않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한다.

“남한 사회에서는 탈북민이라는 꼬리표가 끝까지 따라다니기 때문에 많은 탈북민들이 그 사실을 감추려고 해요. 하지만 스스로를 부끄럽지 않게 생각해야 남들도 나를 존중하게 되지 않을까요? 나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헤쳐나간다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을 거예요.” NUAC



3월 3일 중국 상하이 르네상스 호텔에서 한중 평화통일포럼이 열렸다.

“북핵·미사일 위협 사라지면 사드 불필요하게 될 것”

북핵 해결·동북아 안정에 중국 역할 중요하다는 데 인식 공유

미국의 새 정부 출범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7 한중 평화통일포럼'이 지난 3월 3일 중국 상하이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스트롱맨 시대의 동북아 정세와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 연구실장과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부 교수가 한국 측 패널로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류밍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교수, 귀딩핑 푸단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공커위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실 부주임, 리카이성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이 참석해 최근의 동북아와 북한 정세 변화,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북·중관계,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등에 관해 논의했다.

포럼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이해와 안정을 해친다면 한·미·중 3국이 모여 배치 결정의 직접적 원인이 된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대화해야 한다”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진다면 사드 또한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사무처장은 “핵전쟁의 위협이 없는 안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큰 틀에서 한국과 중국은 상호 협력을 통해 주변의 상황과 관계없이 양국이 지향하는 경제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국 공동의 이익 모색 필요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미·중관계와 한반도’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 박병광 연구실장은 “미·중·일·러 4강의 지도자가 모두 강력한 외교안보 정책을 표방하는 스트롱 맨의 시대가 열렸다”고 분석하며 “미·중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기민한 대응으로 북핵 문제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실장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사드에 반대하는 것이 중국 정부가 사드에 관한 입장 변화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데 커다란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사드 문제로 나빠진 한중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진핑 주석의 체면 세주기(Face Saving)’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기조연설에서 “핵전쟁의 위협이 없는 안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밍 상하이사회과학원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핵이 미국과 대결할 수 있는 핵심 카드이기 때문에 중국의 압박이나 권고만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경제적 압박 외에도 북핵과 관련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중국은 한국을 지렛대로 미국을 견제할 것이 아니라 동북아에서 한반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중 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공동 안보이익’으로 상정하고 한·미·중 신3국 동맹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귀딩핑 푸단대 교수는 “동북아 국가들의 국민 간 교류, 여론 등 안정적인 요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근거 없는 불확실성의 강조보다 국민과 국가의 이익, 역내 평화와 안정, 문화 교류와 협력 등 실질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춰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2세션(주제: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북핵 문제 해법과 한중



박병광 국가안전보장연구소 동북아연구실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부 교수, 류밍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교수, 귀당핑 푸단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공커위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실 부주임, 리카이성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위 왼쪽부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강력한 제재를 이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중 양국이 사드 배치로 반목하기보다 협력해야 한다.”

협력)에서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관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강력한 제재를 이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중 양국이 사드 배치로 반목하기보다 북한의 핵 보유와 탄도미사일 체계 완성 이후에 일어날 동북아의 재앙을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커위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부주임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미 3국이 유연하고 실무적인 협력정신으로 공조해야 한다”면서 “3국이 북핵 관련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성해 북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 부주임은 “미국이 좀 더 전향적으로 움직여 북한과의 신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2(북한, 미국)+X(기타 관련국)’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대북 제재의 효과성을 우려하는 국제사회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최근 한중 양국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의 원인과 명분을 제공하는 북핵을 중심으로 놓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미·중 간의 북핵 공조 차원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카이성 상하이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사드 문제가 한국의 국익과 연결돼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한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양국 공동의 이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사드 때문에 한중관계와 미·중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사드 배치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북핵 문제의 진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도 한중 양국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남궁영 교수는 “최근 들어 미국은 북핵 문제를 국제질서 측면에서 점차 자국의 핵심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레짐 체인지나 선제공격을 고려할 경우 중국의 입장은 무엇일까?”를 화두로 던졌다.

공커위 부주임은 “북한은 당 국가로 김정은 정권과 북한의 국가 이익을 분리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김정은만을 떼어내어 레짐 체인지를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 주임은 “북핵 문제는 중국의 안보와도 관련된 문제로 중국 역시 큰 피해자”라며 “한국의 사드 배치와 한미 공동 군사훈련이 중국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북핵·사드 배치 관해 다양한 의견 교환

박종철 연구위원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2차 제재) 추진과 국제사회에서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노선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관해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류밍 교수는 “북핵은 이미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상태라고 본다”며 “북한이 테러 국가와 핵 거래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게 마지노선을 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류밍 교수는 “중국 기업이 북핵 문제에 따른 유

엔 결의를 위반하면 중국 정부 차원에서 확실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미국의 제재는 결의를 위반한 기업 외의 다른 기업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태우 교수는 “통일이 한국의 이상적인 목표이지만 우선은 남북한의 상생이 현실적인 목표”라며 “한국이 북한의 붕괴를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중국 측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성우 이사장은 “한국에 사드는 생존의 문제인데 중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하고 있어 서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사드 배치가 한국의 생존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을 중국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문제 해결 위해 중국과의 파트너십 중요

권태오 사무처장은 총평을 통해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서로의 관점 차이와 그 차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한중 양국의 입장 차이가 신냉전의 전초가 되지 않도록 원만하게 해소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호 민주평통 중국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는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각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처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한중 간의 협력 방안과 통일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한석희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중 양국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한반도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자문위원과 전문가, 학자 외에도 현지 유학생, 동포 등이 참석해 한중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한중 양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핵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상호 존중의 자세로 입장 차이를 좁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NUAC**



2015년 7월 1일 개최된 제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

제18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이런 분들이 참여합니다

올바른 국가관, 통일 열정 가진 사회 리더 2만여 명으로 구성

오는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는 어떤 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될까? 새롭게 시작되는 2년 임기의 제18기 자문위원에 어떤 인사들이 참여하게 되는지, 어느 기관·단체에서 추천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 위촉하게 되는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주민이 선출한 지역 대표와 정당, 직능단체, 주요 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

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000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법 3조).

또한 대통령은 ①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이 선출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및 구·

시·군의회 의원인 인사 ②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 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③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 ④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⑤그 밖에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법 10조).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인사의 추천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돼 있으며, 반드시 추천기관 또는 추천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또한 추천이 됐다 하더라도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에 저촉되지 않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고, 이북 5도 대표는 이북 5도 지사가 추천하게 된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대표는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이 추천하고,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은 주무관청의 장이 추천하게 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교육의원 포함)는 추천기관의 추천 없이 본인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겠다고 희망하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자격 기준 엄격화… 여성·청년 확대

민주평통 사무처는 제18기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올바른 국가관과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인사를 발굴하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통일·공공외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도덕성과 성실성을 갖춘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제18기 자문위원은 2만 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며, 직능위원의 성별·세대별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층의 비율을 33%로 확대하고 청년층의 참여도 28%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제18기 자문위원 위촉 기준에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자문위원 위촉 후보자 중에서 '자문위원 위

촉 결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위촉을 배제하게 되고, 또한 '신원조사' 결격자 외에도 과거 자문위원 재임 중 '불성실'했던 인사는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사생활의 불성실로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빚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 조직을 활용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사, 정파적 이해관계로 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 중 활동이 전무하거나 부적격으로 '해촉'된 인사, 민주평통 제17기 자문위원 재임 중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 인사, 경찰청 신원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인사가 추천될 경우 위촉 대상자 선정 시 배제하게 된다.

제18기 자문위원 위촉을 위해 민주평통 사무처에서는 지난 2월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천기관 관계관 회의를 통해 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각 추천기관에서는 3월 17일까지 추천을 완료했으며, 추천된 인사들에 대한 신원조사 및 후보자 검증작업이 5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이후 신원조사를 거친 인사들에 대한 위촉 후보자 최종 선정 작업이 이뤄지게 되며,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추천기관별로 위촉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해당 지역 민주평통 협의회에 등록해야 한다.

해외 자문위원은 해외 동포사회의 통일운동을 주도할 인사와 국제사회 통일 지지 기반을 확산할 수 있는 민간 외교사절로서 거주국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인사 등을 해당 지역 재외공관장의 추천으로 3300명 이내로 위촉할 계획이다.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면, 배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공관에서는 관할 공관장이 협의회장 및 한인단체장 등과 협의해 5~7명 내외의 한인단체 대표급 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각 재외공관별 후보자는 재외공관별 재외동포 수를 기준으로 배정하게 된다.

자문위원에게는 자문위원 위촉장과 자문위원증, 배지가 지급되고, 운영위원과 상임위원, 지역부의장과 지역 협의회장 등 간부 자문위원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하게 된다. **NUAC**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9개 지역에서 열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김정남 피살에 따른 북한 정세 진단



지역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을 선도할 통일 역군을 양성하는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가 3월 6일 서울 중구 협의회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3월 8일), 경기 안산시(3월 9일), 서울 양천구(3월 13일), 충남 천안시(3월 14일), 경기 용인시(3월 15일), 인천 계양구(3월 16일), 대구지역회의(3월 20일), 강원 속초시(3월 28일)에서 시작됐다.

민주평통이 2017년도 중점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이번 아카데미는 자문위원과 지역주민들의 통일 인식을 제고하고,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이번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에서는 권태오 사무처장을 비롯한 통일·남북 문제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 문제, 북한 정세와 남북관계, 동북아 국제 정세 등에 관해 설명했다.

서울 중구협의회와 양천구협의회, 대구지역회의에서 개강식과 함께 열린 첫 번째 강의에 나선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미국의 연구기관 보고에 따르면 주변국들은 북한에 대해 핵 개발과 인권 문제보다 북한의 내부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서 "한반도 통일 환경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평화통일의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정책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선 권 사무처장은 또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은 남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민 모두가 평화통일의 염원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강생들은 매주 1강좌씩 10주 동안 10개 강좌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서 대북정책, 안보·국제 정세 등에 대해 강의를 듣게 되며 전체 과정 중 90% 이상 출석해야 수료할 수 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김정남 암살 등 급변하는 북한 정세와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강생 외에도 자문위원과 주민 등 많은 사람들이 청강생으로 함께했다.

한편 이번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는 상반기 9개 지역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10개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2017 자문위원 연수

통일 역량 키우는 자문위원 연수 지역회의별로 개최 '북한이탈주민 멘토 아카데미'도 진행

변화하는 국제 환경과 통일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평화통일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17년 자문위원 연수가 3월 15일 전남지역(동부권, 11개 협의회)을 시작으로 제주지역회의(3월 18일), 충북지역회의(3월 22일), 울산지역회의(3월 28일) 등의 일정으로 각 지역회의별로 시작됐다.

권태오 사무처장은 3월 18일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된 제주지역 연수와 3월 22일 청주 그랜드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충북지역 연수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했다. 기조강연에서 권 사무처장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안보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지만 통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하는 목표"라면서 "통일은 단순히 분단된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가 합쳐져 우리 민족이 발전하는 동력이 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일을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일정책과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라며 "자문위원들이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통일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하는 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 제주, 충북, 울산지역 연수에서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과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김홍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등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통일 인식의 제고와 통일 준비의 방향'과 '북한

체제의 현황과 전망' 등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한편 3만 명에 이르는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사업 추진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 멘토 아카데미'가 지난 3월 24일과 25일 안성에 소재한 한겨레중·고등학교에서 개최됐다.

이날 진행된 멘토 아카데미에는 탈북 청소년들의 정착을 도와주는 멘토 자문위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 사무처장은 "멘토링 사업은 북한에서 온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뜻깊은 일"이라며 "치한 환경과 조건이 다른 곳에서 성장한 탈북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멘토로 활동하는 자문위원들이 땅고르기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멘토 아카데미'에서 자문위원들은 1박 2일의 일정 동안 탈북 청소년들의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며 △멘토링 기법 교육 △탈북 청소년 직업교육 체험 △탈북 청소년들과의 대화 등 멘토로서 활동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받았다.

2017년 자문위원 연수는 4월 4일 서울 강남구(3개 권역)를 시작으로 경북지역회의(4월 6일), 강원지역회의(4월 11일), 광주지역회의(4월 12일), 전북지역회의(4월 13일) 등 5월까지 지역회의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호열 수석부의장, 중남미 3국서 통일강연 한인회 대표·현지 언론인과 간담회도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지난 3월 6일부터 13일까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중남미 3개국에서 자문위원과 교민 등을 대상으로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된 북한 정세와 한반도 통일 환경에 관한 통일강연을 실시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강연에서 “과거에는 통일을 당연한 한국인의 과제이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통일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어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젊은 세대와 국제사회에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이 단순히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에 머무르는 것은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먼저 온 통일로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대북 제재의 효과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아직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방식을 포기할 때가 아니고, 또한 우리는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중남미 3개국을 방문하면서 현지

한인회 대표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한반도 국내외 정세에 관해 설명했으며, 통일 의견도 수렴했다. 또한 현지 언론인과 간담회를 갖고 한반도 안보 정세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유 수석부의장은 “중남미는 한반도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와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긴밀히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통일을 위해 정부와 국민, 재외동포의 단결된 의지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야 하고 자문위원을 비롯한 동포사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워싱턴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 성금 전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3월 4일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Wall of Remembrance)’ 건립을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대표해 유호열 수석부의장이 윌리엄 웨버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한국전 참전 예비역 대령)에게 국내외 2만여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모금한 성금 20만 5000달러(약 2억3700만 원)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성금은 국내와 해외 자문위원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 동안 한국전 참전

전사자와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추모의 벽’ 건립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기금 모금 활동을 벌여 마련됐다.

‘추모의 벽’은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을 둘러싸는 대형 유리벽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전사자 3만7000여명의 이름이 모두 새겨진다. 벽에는 또한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미군과 한국군, 카투사 장병, 연합군 사망자 수 등 관련 정보들도 함께 기록된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국전 참전 미군 유공자와 미국 정부의 관료 및 주요 정치인, 미 버지니아주 캐롤라인중·고교 학생,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과 주미 한국공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사업은 한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탈북 맘들의 정착 시기 공모전’ 4월부터 접수 시·도 여성위원장 회의, 사업 등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3월 7일 오후 1시 민주평통 사무처 회의실에서 국내 각 시·도 여성위원장 18명이 한자리에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시·도 여성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권태오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여성 통일리더 아카데미 등 여성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다채롭게 진행돼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는 18기 자문회의가 새롭게 구성되는 만큼 여성 중심의 통일 활동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여성 자문위원들이 추진한 통일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여성위원회가 계획하는 통일 역량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통일 맘 정착 시기 공모전’과 여성 지도자 통일 공감 좌담회 등 여성위원회 특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사전 홍보 등에 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탈북 여성들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사례들을 발굴·공유하기 위한 ‘통일 맘 정착 시기 공모전’은 오는 4월부터 지역별로 접수를 시작한다. 시기 공모전은 북한에서의 삶, 탈북 및 성공적인 정착 과정을 주제로 하며 국내에 정착한 탈북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들에 대해서는 지역 예선과 전국 결선을 거쳐 오는 10월에 대상 1편과 우수상 3편 등 모두 14편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여성위원장들은 오는 7월 제18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을 앞두고 계획됐던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제17기 여성위원회 활동이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기지역회의 ‘북한 핵에 예방타격’ 주제로 포럼 개최

경기지역회의(부의장 박해진)는 3월 8일 경기경제와 학진홍원 광고홀에서 경기지역 31개 시·군 협의회장과 포럼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핵에 대한 예방타격과 선제타격’이라는 주제로 평화통일 리더

스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발제에 나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위협을 진단하고, “후대에까지 핵 위협을 물려주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예방타격’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발제에 이어 유영옥 경기평화통일포럼 연구위원장의 진행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데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충북지역회의 ‘동북아 정세’ 주제로 평화통일포럼

충북지역회의(부의장 한상길)는 3월 13일 청주 수라채 회의실에서 자문위원과 포럼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충북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재록 청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과 한반도 통일 환경 전망’이라는 주제로 유호근 청주대학교 정치안보국제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섰으며, 김일수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포럼은 발제와 지정토론에 이어 참석자 전원이 의견을 개진하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포럼 참



석자들은 주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가 동북아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정부가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대구 수성구협의회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 열어

대구 수성구협의회(회장 신철범)는 지난 3월 7일 여성 자문위원과 지역 여성 지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보성에서 ‘수성구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를 열었다.

‘통일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안제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 특강을 했으며, 유진영 수성대 교수와 권수자 수성구 장학재단 이사, 조재희 하나원센터 소장 등이 대표 토론자로 나서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한 위원들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 역량을 키워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전 중구협의회 대전현충원 참배, 환경정화 활동

대전 중구협의회(회장 한재득)는 3월 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자문위원과 가족, 지역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현충원 묘역 참배 및 환경정화 활동’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봄을 맞아 본격적인 협의회 활동에 앞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충탑 헌화와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하고, 묘비 닦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울산 남구협의회 여성 통일 역량 강화 위한 좌담회

울산 남구협의회(회장 최해상)는 지난 3월 7일 협의회 통일정책분과위원회 위원들과 여성 자문위원, 울산 여성포럼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남구청 회의실에서 ‘2017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를 개



최했다.

여성의 통일 준비 역량 강화와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열린 이번 좌담회는 한반도 통일 환경과 국제 정세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에 이어 참석자들의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좌담회에서는 이병철 울산대 교수가 ‘신냉전 체제하의 한반도 통일정책’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도희 울산대 교수의 사회로 참석자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좌담회에서는 통일 지지 기반 확립을 위한 여성 지도자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고, 여성들이 앞장서서 내실 있는 통일 준비가 이뤄지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원 홍천군협의회 제2기 통일대학 개강식 가져

강원 홍천군협의회(회장 양태호)는 3월 14일 홍천읍 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통일·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제2기 홍천 통일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박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첫 번째 강연의 강사로 나서 ‘북한을 알면 통일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강대덕 화서학연구소장이 ‘북한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서는 주제에 맞춰 통일·안보 관련 전문가와 북한이탈주민 등이 강사를 맡을 예정이며, 이날 첫 강의를 시작한 제2기 홍천통일대학은 4월 4일 까지 4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총 8회의 강의를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엄격한 출결 관리를 통해 8회 강의 중 6회 이상을 수강해야 수료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료생들에게는 다양한 민주평통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전북 부안군협의회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통일 이야기

전북 부안군협의회(회장 이영식)는 지난 3월 2일 오전 7시부터 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 홍보활동을 펼쳤다.

통일 기반 조성과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청소년들이 통일 문제와 북한의 실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한 정책 설명과 만화 등으로 구성된 홍보물을 제작해 등교 시간에 맞추어 배포했다.

부안군협의회는 많은 주민들이 통일과 대북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통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 지속적인 통일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전남 해남군협의회 자문위원 통일안보 현장 견학

전남 해남군협의회(회장 명채규)는 안보관 확립과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해 3월 14일과 15일 자문위원 40여 명이 판문점과 안보견학관, 제3땅굴, 도라산역, 강화도 유적지 등을 견학했다.



이번 통일안보 견학은 자문위원들의 통일 의식 확립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동경비구역(JSA) 내 자유의 집과 중립국감독위원회 회담장, 돌아오지 않는 다리, 도끼만행 사건 현장, 제3땅굴 등 남북 분단의 의미 있는 장소들도 함께 둘러봤다.

서울 강북구협의회 협의회 20년 활동 보여주는 출판기념회

서울 강북구협의회(회장 김송대)는 3월 9일 오후 2시 강북구청 4층 대강당에서 자문위원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북구협의회 21년사를 담은 <통일로! 미래로! 민주평통 강북구협의회 21년사>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번에 출판된 <강북협의회 21년사>는 지난 1995년 신설된 강북구협의회 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 책에는 강북구협의회가 지역사회에서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노력한



지난 20여 년간의 기록들이 600여 쪽의 자료집에 정리돼 있다.

특히 지역에서 열린 ▲통일시대 시민교실 ▲캠페인 ▲안보 현장 견학 ▲북한이탈주민 어울림 한마당 등의 행사뿐 아니라 자문위원 위촉장과 임명장, 각종 공문과 자료들이 6기부터 17기까지 활동 기간에 따라 정리·기록돼 있어 민주평통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경기 안산시협의회 제13기 지도자 아카데미 개강식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오복)는 3월 9일 안산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통일·북한 관련 전문 역량을 함양하고 통일 의지 고양을 통해 통일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통일대학 제13기 민주평화통일 지도자 아카데미' 개강식을 가졌다.

개강식과 함께 진행된 첫 강의에서는 안제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 아카데미 추진 목적과 운영 등에 관해 설명하고 최근의 북한 정세를 진단하는 특강



을 했으며, 제종길 안산시장은 '안산시 비전 및 통일운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번 통일대학은 13주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대북정책과 국제 정세, 북한 동향과 안보 문제를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강의를 열고 안보 현장 견학도 진행된다.

경기 용인시협의회 용인시민 평화누리 안보체험

경기 용인시협의회(회장 황신철)는 3월 10일 자문위원과 지역주민 등 40여 명이 공동경비구역 JSA(판문점) 등 안보 현장을 견학하는 '평화누리 안보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안보체험에서 참가자들은 판문점 내 공동경비구역 지역, 제3땅굴, 도라산 전망대, 도라산 역사 등 안보 관련 시설들을 견학했다. 특히 임진각에서는 통일을 염원하며 통일 소원 풍선 날리기, 한 줄 통일생각 적기 등 통일에 대한 참석자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행사도 함께 실시했다.

경기 수원시협의회 탈북민과 함께 요양원서 나눔 실천

경기 수원시협의회(회장 손재필)는 3월 15일 자문위원과 북한이탈주민 등 20여 명과 함께 수원보훈요양원



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 참가자들은 발 마사지, 이동과 식사 돕기, 인지치료 프로그램 지원 등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고, 성인용 기저귀 20박스를 요양원에 전달했다.

또한 수원시협의회는 다양한 봉사활동과 협력, 교류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수원보훈요양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서울지역회의 직능단체 여성 임원 대상 통일강연회

서울지역회의(부의장 손경식)는 3월 20일 소월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직능단체 여성 임원진과 자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능단체 여성 임원진과 함께하는 통일강연회'를 개최했다.

민주평통 서울지역회의가 주최하고, 서울지역회의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영숙)가 주관한 이번 강연회는 '좌담회 참석 직능단체와 함께하는 리마인드 통일강연회'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호열 수석부의장이 헌법에 준치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민주평통의 설립 근거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남북한의 주요 지표 비교 ▲북한의 최근 정세 및 주변국과의 관계 ▲통일 후 경제성장 전망 ▲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 등에 대해 강의했다.

한편 김영숙 서울지역회의 여성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에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론 결집을 이루면 통일 한반도의 시대는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지역회의 제4차 평화통일 리더스 워크숍 개최

인천지역회의(부의장 허희숙)는 3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동안 인천지역회의 및 각 지역협의회 간사, 청년위원장, 여성위원장, 행정실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안면도 리솜오션캐슬에서 '제17기 제4차 인천지역 평화통일 리더스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통일 퀴즈 대회 ▲통일 역사 강의 ▲분임 토의 등을 통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배운 통일 지식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통일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분임토의에서는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 운영 방안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통일 기반 조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 추진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충북 보은군협의회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 실시



충북 보은군협의회(회장 이남수)는 3월 27일 보은중학교 강당에서 재학생과 교직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한국과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청소년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탈북민 출신의 강사 유현주 씨는 북한의 교육과정과 학교 생활 문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 진도군협의회 '생생 통일 공감' 토크콘서트 열어

전남 진도군협의회(회장 이기암)는 3월 27일 진도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생생 통일 공감'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자문위원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통일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탈북민 강사가 북한의 실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통일 대화' 시간은 주민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통일 대화'에서는 ▲북한과 남한 농촌의 차이점 ▲북한의 자녀



계획과 교육 ▲북한의 주거 환경과 생활풍습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

충남 아산시협의회 통일시대 시민교실 개최

충남 아산시협의회(회장 김세영)는 3월 21일 온양제일호텔에서 '2017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대북정책 현안과 북한 실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통일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통일시대 시민교실'에는 자문위원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이미연 탈북강사가 '북한의 이해, 통일의 이해'라는 주제로 북한 실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통일 비전과 국론 통합'이라는 주제로 안제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 관련 국제 정세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부산 부산진구협의회 봄바람 타고 흐르는 통일 공감 콘서트

부산 부산진구협의회(회장 백옥자)는 3월 22일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평화통일 공감 콘서트'를 개최했다. 지역주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 한마음으로 통일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열린 이번 음악회는 자문위원과 탈북민, 지역주민 등 650여 명이 함께했다.

1, 2부로 나눠서 진행된 이번 콘서트에서는 탈북민 권설경 씨가 강사로 나서 ‘북한 주민들의 실상’이라는 주제로 통일 강연회를 열었고, 2부에서는 부산진구라운소년소녀합창단, 소프라노 전이순, 피아니스트 백민정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었다.

한편 이날 콘서트의 부대행사로 남북한의 발전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사진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제주시·북유럽협의회 ‘앞당기자 통일 미래’ 합동 심포지엄



제주시협의회(회장 임강자)와 북유럽협의회(회장 최월아)는 3월 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홀리데이 에어포노스 호텔에서 ‘함께하자 통일 준비, 앞당기자 통일 미래’라는 주제로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제주시협의회와 북유럽협의회 자문위원,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총영사관 직원 등 40여 명이 자리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강근형 제주대 교수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반도’에 대해 설명하고, 백범흠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가 ‘통일 독일에 비춰본 한반도 통일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양 협의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통해 자문위원의 통일 역량 강화와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합천군협의회 자매결연 “태평양을 넘나들며 통일 위해 노력”

미국 샌프란시스코협의회(회장 정승덕)와 경남 합천군협의회(회장 이점용)는 3월 17일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현지 무역관에서 샌프란시스코·경남 합천군협의회장과 자문위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자매결연 협약식을 통해 샌프란시스코협의회와 경남 합천군협의회는 상호 교류와 만남의 장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통일운동 활성화와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과 함께 열린 ‘샌프란시스코협의회 통일 아카데미’에서는 차만재 프레지노주립대 명예교수가 ‘미주한인 이민사와 통일 전망’을 주제로 강연했다.

로스앤젤레스협의회 자문위원과 함께하는 1박 2일 수련회

로스앤젤레스협의회(회장 임태량)는 3월 18일과 19일 1박 2일에 걸쳐 C.J 그랜드 호텔에서 이채진 클레이몬트대 교수를 초청해 ‘트럼프 행정부와 한반도의 장래’를 주제로 자문위원 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련회에서는 미국 새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와 교민 사회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튿날에는 ‘8천만이 행복한 통일 강론’을 통해 자문위원들의 통일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청소년 대상 통일 관련 사진·동영상 공모전 청소년들에게 ‘통일’은 무엇일까?

민주평통은 4월부터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 관련 창작물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통일 청소년 사진·동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창작물을 제작하는 이번 콘테스트는 초·중·고등학생 또는 동 연령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여러 편의 작품을 제한 없이 응모할 수도 있다.

콘테스트 응모 주제는 통일에 대한 자유 주제로, 응모 작품은 ▲내가 생각하는 통일 ▲통일의 필요성 ▲통일 미래비전 제시 등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4월부터 6월까지 각 지역협의회별로 접수 후 주



제 적합성, 창의성, 표현력을 중심으로 평가해 시·도별 예선대회 수상작을 선정하고, 시·도별 수상작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거쳐 전국 결선대회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초·중·고등부로 나누어 진행되는 시·도별 예선대회는 대상 1명(팀) 20만 원, 최우수상 2명(팀) 15만 원, 우수상 3명(팀) 10만 원을 수여하고 전국 결선대회는 대상 1명(팀) 100만 원, 최우수상 2명(팀) 50만 원, 우수상 3명(팀) 30만 원, 장려상 10명(팀) 5만 원이 수여된다.

2017 통일골든벨 시·도대회 5월부터 개최 580개교 18만여 명 참가 예정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건전한 통일관과 역사관을 키우기 위한 ‘2017년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시·도대회’가 오는 5월부터 개최된다. 전국 17개 시·도 지역회의와 미국 등 해외 16개국에서 580개교 18만여 명이 참가하게 되는 통일골든벨 시·도

대회는 해당 지역 시·군·구 지역협의회별로 개최한 예선전에서 입상한 청소년들이 참여한다.

지역협의회 예선전은 지난 3월 초부터 각 지역협의회별로 시작되었고, 지역회의별 대회는 오는 5월 18일 경북지역회의를 시작으로 전국 지역협의회별로 진행된다. 이번 통일골든벨 지역대회에서는 대상(1명)에 민주평통 의장상(대통령상)이 주어지고, 최우수상과 우수상 및 장려상에 민주평통 지역부의 장상, 특별상(교사상, 학교상)에 민주평통 사무처장상이 수여된다.

또한 지역대회에서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한 학생 100여 명은 오는 7월에 있을 KBS 도전 골든벨 특집방송에 출연해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

미래의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이 지금의 어린이, 청소년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통일교육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일까. 충북 청주시협의회(회장 안덕호)의 활동 상당수는 청소년 통일교육에 집중돼 있다. 아울러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를 실시해 북한 실상을 알리는 지도자 양성 과정에도 힘쓰고 있다. 4주 차에 걸친 아카데미 수료생 200여 명이 매년 통일 지도자로 거듭나고 있다.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는 청주 시민의 국가관과 통일관을 고취하고자 하는 저희의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입니다. 3월 10일에는 참가자들과 함께 남북 분단의 현자인 파주 임진각, 제3땅굴, 도라산 전망대 등으로 안보 견학을 다녀왔죠. 명절에도 고향에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이 합동으로 부모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설명을 듣고는 눈시울을 붉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는 실향민들이 가족을 그리며 남긴 글귀를, 도라산역에선 멈춰 선 도로와 철로를 보



- 1 경기 파주시 임진각으로 떠난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 안보 현장 견학'.
- 2 청주 서경중학교에서 열린 '탈북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 행사.
- 3 청주 시민 수백 명이 참가한 '여성 통일 공감 한마당'.
- 4 청주 일신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탈북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 현장.
- 5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 개강식에서 청주시협의회 안덕호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통일의 주역은 청소년, 청소년 통일 의식 고취에 힘쓸 것”

어른들끼리만 통일의 중요성을 외치는 건 무의미하다. 청주시협의회는 미래 통일의 주역인 청소년 통일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면서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모두가 염원했죠.”

멀리 파주까지 올라와 역사의 현장을 눈 안에 담아가면서 안덕호 회장을 포함한 협의회 회원들은 통일의 필요성과 희망을 다시금 되새겼다.

청주시협의회는 미래 세대를 위한 청소년 통일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개최된 중학생,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충북지역 본선대회에서 청주시 소재 중·고등학교가 각각 3등 민주상과 2등 평화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고등학생 통일골든벨에는 전체 참가자 500명 중 200명이 청주시 학생일 만큼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2등을 비롯해 다수가 입상했으니 흡족한 성과죠.”

이뿐 아니다. 지난해 한 해에만 '탈북 청소년과 함께하

는 통일 이야기' 행사를 총 6회에 걸쳐 실시해 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어올렸다.

“6개 중·고등학교에서 약 2300명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학생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남학교에는 탈북 여학생을, 여학교에는 탈북 남학생을 데리고 갔더니 학생들이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분위기였어요. 한 학생은 행사가 끝날 때쯤 탈북민들을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와 탈북 학생들이 다니는 방과 후 공부방을 연결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청주시협의회는 청소년 통일교육이 각광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보여주기식 강의를 아니라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기 때문이다.

“단순한 강의로는 매일 공부만 하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가 어려울 것 같았죠. 이왕이면 또래의 탈북 학생, 거기다 서로 이성관계이면 학생들이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협의회 내부의 의견이 많아 그렇게 진행했어요. 상품권도 제공했구요. 결과적으로 모든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행사였죠.”

청주시협의회가 이처럼 청소년 통일교육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다른 '적극성'이 만든 통일교육의 성과

“대부분의 청소년들, 심지어 청년들까지도 왜 남북이 나누어졌는지, 북한은 어떤 나라인지, 왜 통일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차세대 통일 지도자인 이들에게 더 늦기 전에 남북관계와 북한의 현실, 세계정세를 알려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의지를 고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협의회는 청소년 통일교육이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협의회 회원 개개인의 노력도 크게 작용했다. 지난해 12월 '2016 민주평통 평화통일 기반 구축 유공 자문위원 국민훈포장 수여식'에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한 홍순철 간사도 그중 한 명이다. 홍 간사는 통일캠프 운영, 통일

미래세대 올바른 역사교육 촉구대회, 통일의 지방화를 위한 평화통일 심포지엄, 여성 통일공감 한마음 워크숍 등을 개최하며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수상하신 간사들과 자문위원들은 청주시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통일 활동뿐 아니라 도 지역회의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지역 내 많은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죠. 이러한 봉사정신과 적극성 덕분에 저희 협의회는 통일교육 및 통일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꼼꼼히 수렴하고, 청주시 민간단체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평화통일에 관한 의견 수렴을 잊지 않는 것도 청주시협의회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이유다. 안 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회원들의 힘찬 의지는 오늘도 통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중이다.

“과거 서독 정부가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동독이 통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국제 환경의 변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세계 우방과 함께 북한을 변화시켜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두가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에 한마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AC**



“내가 죽으면 동해 어귀의
큰 바위 밑에 장사를 지내라.
내가 용으로 화하여
왜구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

1 문무대왕 수증릉 2 이견대



2

삼국통일을 완수한 문무대왕은 용이 되어 왜구의 침입을 막겠다며 자신을 동해에 묻으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동해 어귀의 큰 바위 위에 장사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옥대, 만파식적과 함께 전해 내려오는 문무대왕 수증릉의 전설이다.

최민희 경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리라’ 파도와 바람이 일깨우네

1967년 5월 15일 오전 11시. 경주 동해안 해변 바윗돌 임시 제단 앞에서 한 무리가 바다를 향해 제(祭)를 올리고 있었다. 향을 한 다발 피우고, 정성 들어 준비한 산해진미를 제물로 차려놓고, 신라 토기 잔에 제주(祭酒)를 따라 올리고 나서, 독특하게 네 번 절을 올렸다. 실로 천 년 세월이 흐른 뒤에 대왕께 제를 올린 것이다. 이들은 신라오악학술 조사단으로, 제례에 앞서 오전 10시쯤부터 한 시간가량 바다 가운데 있는 ‘대왕바위’라 불리는 바위섬에 올라 조사하는 시간을 보내고 온 참이었다.

커다란 바위섬 한가운데에는 넓은 반석이 놓여 있고, 주변은 깊게 파여 있을 뿐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물도랑도 나 있었다. 자연에 의해 이렇게 만들어졌을 리 만무하므로 영락없이 인공으로 조성된 바닷속 작은 호수였다. 반석은 맨드리하게 닳고 넓적한 모습으로 보아 틀림없이 무덤의 덮개돌이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조사대원들은 동쪽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와 포말을 이루며 호수에 들어와 잠시 머물다 잔잔해진 뒤에는 서쪽 물길을 따라 해안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지켜보았다.

신라 제30대 문무대왕의 유언에 따라 화장해 모셔진 수증릉 대왕암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삼국사기>를 비롯한 조선시대 각종 지리지에 감은사 해안 이견대 아래에 대왕암이 있다는 기록이 있음에도 수증릉이라는 사실은 잠시 잊고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일제강점기에 우현 고유섭 선생께서 대왕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경주에 가면 반드시 대왕암을 찾으라고 하신 가르침의 결과가 이렇게 문무대왕릉 재발견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30-1번지 대왕암은 1967년 7월 27일 ‘경주 문무대왕릉’이라는 이름으로 사적(제158호)이 되는 행사를 열 수 있었다. 이 행사는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수증릉이라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왕릉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를 기념해 현재 이견정 옆에는 ‘문무대왕 유언’비, 우현 고유섭 선생의 ‘대왕암’ 시비와 ‘나의 잊지 못하는 바다’ 비가 세워져 있다. 그 곁으로 초우 황수영, 수목 진홍섭을 기리는 비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문무대왕은 백제 온조왕조를 660년에 무너뜨린 태종무



1 감은사지 석탑 2 이견대에서 본 일출. 3 감은사 터

열왕을 이어 668년에 고구려 주몽왕조를 굴복시킨 다음, 한반도를 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낸 당나라마저 이 땅에서 몰아낸 끝에 평화를 이룩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동해 바다 건너 저편에는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왜가 남아 있었다.

왜는 신라 초기에 자주 침범해 재물을 약탈하는 등 많은 피해를 주었다. 그런 왜구의 침략에 대비해 신라는 동해구(東海口)를 방비할 대책이 필요했다. 이런 절심함에 따라 문무대왕은 사찰을 건립하기 시작했으나 완공을 보지 못하고 680년 돌아가셨다. 이를 이어받아 아들 신문왕이 682년에 완공하고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절 이름을 '감은사(感恩寺)'라 했다.

용이 되어 왜구를 물리친 문무대왕

감은사 금당 아래에는 용이 되신 아버지 문무대왕이 쉴 공간을 만들었다고 〈삼국유사〉는 전한다. 하지만 이 공간은 익산 미륵사 금당과 마찬가지로 미르 즉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로 이해하면 될 일이고, 미르는 또한 용이므로 이런 전설이 전해지게 됐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당나라를 몰아냄으로써 삼국통일을 이뤄 백성들에게 전쟁이 없는 평안을 가져다준 임금을 기리기 위함이었다. 문무대왕의 이 같은 마음 때문에 동해안에는 대왕신앙이 성행해 울산에도 대왕암이 있고, 동해를 건너 일본에서도 대왕암을 남기고 있다.

이곳 감은사에는 신라에서는 처음으로 석탑을 동서에 쌍으로 조성했다. 3층탑은 삼층 몸돌을 제외한 기단부와 탑신부를 모두 조립식으로 했다. 유일하게 통돌로 된 3층 몸돌 윗면

에 긴 네모 홈을 파고, 여기에 부처님의 사리를 안치한 사리장치를 두었다. 목탑에서는 지면에 있던 사리장치가 맨 꼭대기로 올라간 것이다. 이들 동서탑에서 나온 사리장치는 통일신라의 우수한 금속공예 기술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아주 빼어난 작품이다. 이곳 감은사에서 시작된 신라 3층석탑은 이후 고려시대 까지도 유행했다.

신문왕은 어느 날 동해에 바위섬 하나가 떠온다는 보고를 받는다. 직접 동해구 이견대로 행차해 바라보니, 과연 바다 한 가운데 거북처럼 생긴 섬 하나가 떠 있고, 거기에는 대나무가 서 있는데 낮에는 둘이었다가 밤이면 하나가 되었다. 임금이 배를 타고 섬에 올랐더니, 용이 옥대(玉帶)를 바쳤다. 용왕이 보낸 옥대를 얻고, 또 대나무를 벤 다음 서라벌로 향했다. 중간에 만난 왕자가 옥대의 비늘 하나를 떼어 물에 던져 넣으니 용이 되어 하늘로 날아갔는데 이곳을 용연(龍淵)이라 한다.

궁에 돌아와서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었는데, 영험하기가 그 지없어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고 하였다. 월성 천존고에 보관한 이 피리를 불면 신이(神異)한 일이 일어났다. 쳐들어오던 적이 물러가고, 유행하던 질병이 나았으며, 가뭄에 비가 오고, 장마에 날이 개며, 폭풍우 비바람이 멎고, 거센 파도 물결이 가라앉았다. 심지어 적에게 잡혀간 부레랑이란 화랑을 구해온 것도 이 만파식적이었다.

동해구에서는 이렇게 용왕이 된 문무대왕이 보내주신 옥대를 얻고, 제석천의 아들이 된 김유신 장군과 대왕이 함께 주신 대나무로는 만파식적이라는 신비로운 피리를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얻은 두 보물 가운데 하나인 용이 살아 꿈틀거리는 검은 옥대는 신문왕의 권위를 세워주었으리라. 이미 신라에는 진평왕이 상제로부터 받은 옥대가 신라의 세 가지 보물 중의 하나가 되어 있었으니 말이다. 이뿐만 아니라 통일전쟁의 두 영웅인 문무대왕과 김유신 장군이 전한 대나무는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더없이 신이한 피리였으니, 이 또한 신라의 보물인 것이다.

옥대와 만파식적

이렇게 문무대왕께서 계신 수중릉 대왕암과 왜병을 막는 근거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든 감은사가 있고, 대왕암을 바라본 이견대까지 함께한 이곳 동해구는 신라에서 더없이 중요한 곳이었다. 신문왕이 행차하던 시절에는 해수면 변동으로 지금처럼 바닷물이 빠지고 강물이 흐르는 지형이었던지는 알 수 없지만, 토함산 동쪽 해안을 지켜주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듯하다. 이곳을 기억하면서 둘러보면 좀 더 의미 있는 해파랑길이 되리라 생각된다.

문무대왕암에서 남쪽으로 이십여 리를 가면 천연기념물(제536호)인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이 나온다. 전국에 주상절리는 많지만, 가까운 포항 달전 주상절리처럼 대부분 수직으로 발달한 단순한 형태이다. 하지만 이곳 양남 주상절리군에는 부채꼴이라는 희귀한 모습의 주상절리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고 이곳에는 부채꼴 주상절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서 진리항에서 읍천항까지 1km가 넘는 구간에 옆으로 누워

있는 주상절리가 장작더미처럼 쌓여 있을 뿐 아니라 수직으로 있거나 옆으로 기울어진 주상절리 등이 뒤섞여 있다. 해안에서는 현무암, 안산암으로 이뤄진 주상절리가 너무나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는 주상절리를 구경거리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암석학 내지 지질학을 학습하는 자연학습장으로 대하면 더욱 좋으리라 생각된다.

주상절리에 대해서 미리 조금은 알아보고 현장에서 관심을 갖고 관찰한다면 제대로 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콜로네이드(나란히 선 돌기둥)들 가운데 잘 발달한 엔터블러체(복잡하게 얹혀 있는 돌기둥의 끝부분)들을 이곳저곳에서 찾아보기를 권하고 싶다. 더하여 이곳에서는 해안선을 이루는 제해안단구와 탐방로로 사용되는 제2해안단구가 잘 발달해 있다. 국도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면 제3해안단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하서지 봉수대 유적이 남아 있다.

자연과학으로 본 수중릉의 정체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할 일은 대왕암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존중해 문무대왕을 대왕암에 장례 지낸 것으로 이해해왔다. 하지만 최근 자연과학적으로 접근하면서 달라지고 있다.

먼저 대왕암 가운데 놓여 있는 반듯한 돌인 반석은 밖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설치했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1993년 6월 대왕암에 올라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반석과 주변 바위의 암질은 다르지 않았다. 반석은 옆에 있는 바위에서 일부가 떨어져 오랜 세월 마모되면서 물속에 잠겨 있었으니 작은 틈새(절리)가 생기지 않았지만, 주변의 바위는 세월의 풍상을 겪으면서 무수히 많은 틈새가 생겨 겉보기에 차이가 생겼던 것이다. 다음으로 동쪽으로 들어온 물이 반석 주변에서 잔잔해진 다음 빠져나가는 서쪽에 물도랑처럼 형성된 부분을 인공으로 조성한 정 자국이 남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꼼꼼하게 살펴보면 인공의 흔적으로 인정할 만한 원가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올해 5월 15일이면 대왕암이 문무대왕의 수중릉임이 밝혀진 지 꼭 50년이 된다. 현대에 와서 과학이라는 눈으로 실체를 파악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삼국사기〉에서처럼 분명 '동해구 바위에 장사 지냈다'는 기록도 있고, 정말 왕릉일지도 모른다는 점 등에서 신비로움의 영역으로 남겨두어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NUAC**

남북통일은 어느 체제로?

통일은 국민이 단합된 통일 의지를 가질 때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 구소련과 동유럽이 무너지고 탈냉전 시대가 열린 이래 자유민주주의식 통일은 당연시되고 있다. 또한 북한 체제가 먼저 민주화돼야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식 통일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 남북통일은 한반도 내부의 일일 뿐 아니라 국제 문제이기도 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될 때 중국도 민주화가 가능해지고,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이 보장되며, 전 세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 그런 만큼 한국 주도의 통일은 당연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변 4대 강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필수요인이다.

최근 국제 정세는 국익 우선주의와 새로운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세계적 차원의 전쟁 위험보다 국지적 무력 충돌과 민족, 종족, 종교, 영토를 둘러싼 분쟁 위험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탈냉전 시대에는 정치, 군사, 이념보다 자원, 식량, 인구, 환경, 마약, 범죄, 테러 등에 의한 국가 간 대외 관계가 더 중요해졌다. 이런 세계적 탈냉전의 질서 재개편은 통일을 이루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주고 있다.

탈냉전은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자력 경쟁 발전전략에 의한 자립경제 정책의 실패로 북한의 경제 침체 현상이 심화되고,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는 북한 체제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은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 민족(김일성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워 북한 주민의 내적 결속을 다지기 위해 인간함을 쓰고 있다. 하지만 북

정영순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철학 박사,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회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가보훈처 공적심의위원 역임. 현 교육부, 경기도 청 심의위원

한 정권은 정치, 경제 분야에서의 총체적 난국 타개가 어려워지자 마지막 선택으로 핵 개발을 통한 정권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북한 상황을 종식시키고 하루빨리 남북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사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고히 하고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더욱 굳건한 사회 안정을 유지·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남한 역시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 청년 실업, 결혼 기피, 높은 이혼율로 말미암은 가정 붕괴, 조선 말기적 상황을 연상시키는 정당 간 당파싸움,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간 긴장 고조, 일본과의 관계에서 불거진 불협화음 등이 나타나고 있다. 남한 내 정치, 경제, 사회, 외교는 100여 년 전 겪었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단군 이래 누렸던 대한민국 최대 전성기인 70년의 역사를 뒤안길로 하고 중남미 사례처럼 다시 후진국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것은 괜한 우려일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경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통일 문제에서는 실력배양론과 '선 건설 후 통일'의 기반 위에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등 남북관계에서 우위를 선점했다. 반면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한 북한 정권은 통일 거부 세력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하루빨리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품에 안기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다. **NUAC**



통일 퍼즐

온 가족이 함께 풀어요!

〈통일시대〉에서는 확고한 안보의식을 확립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며,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통일시대〉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통일퍼즐'을 만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통일퍼즐을 풀면서 통일 관련 상식도 쌓고, 문화상품권 당첨의 행운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가로

- 01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을 기념하는 북한의 최대 명절.
- 03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한류 콘텐츠 역제 흐름.
- 05 퇴계 이황과 12년 동안 서한을 주고받으며 사단칠정(四端七情)을 주제로 논쟁을 펼 조선 중기 대표적 성리학자. 〈주자문목〉을 편찬.
- 07 조선 후기 영조가 당쟁을 해소하기 위해 당파 간의 정치 세력에 균형을 꾀한 불편당당의 정책.
- 08 회의에 올려진 본디의 안.
- 10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그의 부인 김정숙이 백두산 인근 지역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했고, 김정일이 태어났다고 주장하며 김일성 일가를 이렇게 부른다.
- 11 키리졸브 훈련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한미 합동 야외기동훈련.
- 13 소녀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웃나라.
- 14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깨물어 먹는 잣, 날밤, 호두, 은행, 땅콩 등 견과류.

세로

- 01 우리나라 국기 명칭.
- 02 남과 북이 다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민간 00부터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 04 3월 3일 중국 상하이에서 민주평통 주최로 한중 전문가들이 모여 동북아 정세와 한중관계 발전을 모색한 행사.
- 06 대학 다음의 학제. 북한에서 '박사원'이라고 부른다.
- 09 유엔 회원국의 평화와 안보를 담당하는 주요 기구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약칭.
- 10 흰 빛깔의 연꽃.
- 12 바다 가운데의 대왕암이라는 돌섬에 위치하는 문무대왕의 무덤은 신라의 무덤 가운데 유일한 000이다.

| 지난 호 <통일퀴즈> 정답 |

1 ③3만여 명 2 ①태영호 3 ②북극성 2형 4 ①화랑도 5 ④북촌

| 지난 호 <통일퀴즈> 당첨자 |

이춘성(서울 구로구), 윤미자(대구 달성군), 이인재(강원 원주시), 강한희(경남 거창군), 양승두(서울 강서구), 박성춘(서울 동대문구), 김명희(광주 남구), 양인규(경기 파주시), 유진수(충남 천안시), 최성자(경북 칠곡군)

위 빈칸의 답을 4월 20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열 분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힌트

〈통일시대〉 4월호(제126호)에 실린 내용을 참고하세요.

보내실 곳

우편번호 04605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통 <통일시대> '통일퍼즐' 담당자

이메일

jmisug@korea.kr ※ 이메일로 보내실 때에는 문화상품권을 받으실 주소를 꼭 적어주세요. 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마감일 이후에 보내신 이메일은 수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